

DSI

안전분야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류유선 · 주혜진 · 박민정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연구진

- 연구책임 • 류유선 /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 • 주혜진 /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박민정 / 대전세종연구원 비상임연구원

요약 및 정책제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생활공간인 도시에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증가.
- 성중립적인 도시 및 안전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비가시화되는 여성 및 장애인, 어린이, 고령자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염려 증가.
- 안전한 도시와 일상생활의 안정에 대한 지역정책 요구.
- 젠더관점으로 대전시의 안전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해, 지역민 모두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 정책의 방향 제안.

■ 연구결과

- 안전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몬트리올 헌장(Montreal Declaration), 도시 여성을 위한 유럽선언(European Charter for Women in the City) 등 여성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옴. 이는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여성의 권리를 가시화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가짐.
- 최근의 도시정책 및 도시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위한 개발과 발전의 관점은 ‘사람의 선택과 능력을 중심에 두고 경제적 성장과 그에 따른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며, 남녀 모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자연과 인간을 보전하고 유지하는 과정’으로 재정의 되고 있음.
- 이에 남성 생산 중심의 공간단위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의 재생산 중심의 공간단위로 도시를 사유하는 것, 도시정치학에서 젠더관계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 즉 사회의 실질적 재생산 주체이자 단위인 가정과 지역사회에 주목하고, 여성 주체를 도시 정치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 대전광역시의 안전정책에 전체적으로 젠더관점의 통합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안전 관련 협의회 및 위원회 구성에 젠더전문가 및 여성가족부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2015년 신설된 대전광역시의 시민안전실의 재난안전대비에 대한 부서 간 협력이 재난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필요.

■ 정책제언

- 대전광역시의 안전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전 과정에 젠더적 관점의 통합을 위해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지침 혹은 점검포인트,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것 필요.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안전 관련 조직이 현재 갖고 있는 의사소통 체계 및 협력방식이 재난시에 제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점검 및 이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 요구됨.
- 자연재난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사고나, 대비 교육 및 훈련, 홍보에서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필요함.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과 지역 등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통해 대비할 수 있음.
- 안전 관련 대비와 대처를 위한 정보 및 교육과 훈련 접근성이 떨어지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안전관련 홍보와 교육의 확대 필요.
- 이재민 수용 시설 및 재난 구호 물품 구비에 있어서 성별, 장애여부, 연령대 등 다양한 관점을 통해 구비하는 노력 필요.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7
1. 문헌 및 자료 분석	7
2. 기존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분석	7
3. 전문가 자문회의	7
4. 심층 성별영향분석평가	8
제2장 이론적 논의	11
제1절 도시와 여성안전에 대한 접근	11
1. 안전한 도시에 대한 여성의 요구	11
2. 도시 여성을 위한 유럽선언	14
3. 안전한 도시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17
제2절 도시에서 여성의 권리	18
1. 도시에 대한 권리	18
2. 도시에서 여성의 권리	22
제3절 안전한 도시와 일상에 대한 정책 요구	25
1. 젠더화된 도시 안전에 대한 인식	25
2. 여성에게 더 불안한 도시	27
제3장 대전광역시 안전 관련 정책 현황	33
제1절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	33
1. 조직	33
2. 정책	35

3. 사업	46
제2절 대전지역 안전 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52
제4장 대전지역 안전 통계 정리	59
제1절 대전지역 안전 관련 통계	59
1. 범죄 관련 통계	59
2. 성폭력 관련 범죄	65
3. 안전사고와 사회 안전망	69
4. 2015 대전의 성인지 통계	74
제5장 대전광역시 [안전기획문화관리]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79
제1절 성별영향평가지표	79
1. 성별영향평가지표	79
제2절 안전기획문화관리사업	82
1. 안전기획문화관리사업 개요	82
2. 젠더관점으로 본 남녀의 경제·사회·문화·신체적 요구의 다름	83
3. 젠더관점에서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99
제3절 대전시 안전분야 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112
참 고 문 헌	118

- 표 목 차 -

<표 1-1> 2014년 사회안전에 대한 대전시민의 인식	6
<표 2-1> 몬트리올 헌장의 주요 내용(Montreal Declaration)	12
<표 2-2> 도시여성을 위한 유럽의 선언 12개	15
<표 2-3>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Perception of Social Safety)	25
<표 2-4>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26
<표 2-5> 범죄의 위협에 대한 인식	27
<표 2-6> 강력범죄 피해자 남녀비율	28
<표 2-7> 키워드 분석으로 본 기사 수	29
<표 3-1> 시민안전실 4개과 담당별 주요업무	34
<표 3-2> 2016년 분야별 세부과제명 및 추진계획	36
<표 3-3> 2016년 대전시 자연재난 부문 관리사업	46
<표 3-4> 2016년 대전시 사회재난관리 부문 추진사업	47
<표 3-5> 2016년 대전시 안전관리대책	49
<표 3-6> 2012~2015년 대전지역 안전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52
<표 4-1> 주요 범죄 발생건수	60
<표 4-2>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61
<표 4-3> 범죄 피해 경험 및 신고	62
<표 4-4> 개인의 범죄피해예방 활동	64
<표 4-5> 대전광역시 전체유형별 범죄발생 건수	65
<표 4-6> 대전광역시 5대 범죄발생현황	66
<표 4-7> 전국 강력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67
<표 4-8> 대전광역시 성폭력 발생현황	68
<표 4-9> 대전광역시 아동·청소년성폭력 발생현황	68
<표 4-10> 화재발생건수와 화재발생 천건당 사망자수	69

<표 4-11> 119 구조 및 구급 활동실적	70
<표 4-12> CCTV 설치 수	71
<표 4-13>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73
<표 5-1> 성별영향평가 지표1	
: 젠더관점으로 본 남녀의 경제사회문화신체적 요구의 다름	80
<표 5-2> 성별영향평가 지표2	
: 젠더 관점에서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81
<표 5-3> 안전기획문화관리사업 내용	82
<표 5-4> 최근 4년간(2011~2014) 성별·연령별 자연재난 피해자 수	87
<표 5-5> 최근 8년간(2006~2013) 사회재난 발생현황	88
<표 5-6>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	91
<표 5-7> 대전시 교통안전교육 현황	115
<표 5-8> 대전시 소방안전교육 현황	115
<표 5-9> 이재민 수용시설 형태	116
<표 5-10> 재난 구호 물품	116

- 그림 목 차 -

[그림 2-1] 키워드로 본 뉴스기사 분석	29
[그림 3-1] 시민안전실 조직도	33
[그림 3-2] 2016년 안전도시종합계획 중점과제	36
[그림 5-1] 재난 재해 안전교육 수혜 경험	84
[그림 5-2] 재난대비능력	86
[그림 5-3] 교통사고발생률	89
[그림 5-4] 성별 구조 인원	90
[그림 5-5] 직업별·성별 구조 인원	90
[그림 5-6] 안전의식	92
[그림 5-7]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94
[그림 5-8]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	113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성평등 수준은 ‘안전’ 분야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안전이 대전지역 남성에게 비해 여성들이 불만족이 크다고 발표되면서 정책에서도 긴급한 아젠다라고 되고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2013년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에는 시민안전실을 신설하는 등 안전분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안전은 시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범죄 등 모든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신체와 정신적 안녕, 나아가 삶의 공간인 공동체의 발전까지 포함한다. 시민 개개인의 삶의 안녕과 개인들이 맺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확장을 통해 지역사회는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전염병 등과 같은 환경문제, 신종 전염병과 질병과 관련된 의료와 보건문제, 강도와 살인 같이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장애인 및 성소수자, 이주민과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노와 학대, 폭력 등 다양한 사회 불안 요소들이 도시 안전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 생활공간, 도시 안전에 대한 불안 증가

최근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시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16년 6월 서울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 사고¹⁾’에서는 19살 청년이, 이에 앞서 2016년 5월

1)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홀로 수리하다 19살 청년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로 ‘비정규직’, ‘청년노동’, ‘외주화’, ‘관피아’ 등 다양한 논쟁을 일으켰다.(한겨레신문, 5월 31일자, “스크린도어 고장 연 1만여건 ‘월140만원 청년’ 돌려막기”, 정은주, 박태우, 이재욱; 한

에 발생한 ‘강남역 노래방 살인 사건²⁾’에서는 23살 여성이 희생당했다. 생존을 위협하는 사건과 사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경제적으로 구조화된 것이라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공적영역에서 도시 안전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시작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경제상황과 경쟁의 심화, 청년실업의 증가, 여성을 중심으로 한 불안정(precarious) 노동의 증가, 계급의 고착화, 양극화의 강화와 약자에 대한 혐오와 분노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공격의 증가 등은 도시 안전체계와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안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병두, 2016; 우에노 치즈코, 2016³⁾). 거주지이자 일터인 도시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특정범주 시민에게 더 많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안전정책이 강화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 젠더화된 도시 안전에 대한 인식

일상적 삶의 공간인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보통 남성 직장인으로 상상된다. 그러나 실제 남성들은 직장과 집을 위주로 생활하며 오히려 여성들이 거리, 시장, 마트,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 도시공간을 다양하고 넓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여성의 장소는 가정, 남성의 영역은 공적영역이라는 오래된 성별이분법은 버스손잡이의 높이나 화장실의 개수 등을 당연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왔다. 이처럼 구체적인 영역을 살피면서, 도시계획, 건축, 교통, 복지, 안전 등으로 시야를 확장해보면, 시민대상의 정책들이 남성을 중심으로 수립, 시행되어 왔음을 인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주요한 성주류화 제도로 이용되고 있다.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조사에서, 불안하다는 비율(50.9%)이 안전하다는 비율(9.5%)보다 5배이상 높게 나왔다. 남녀성별로는 여성들이 더 불안해하고 덜 안전하

겨레신문 5월 29일자, “나홀로 작업에 날아간 ‘19살의 꿈’”, 이재욱, 방준호)

2) 2016년 5월 17일 새벽에 강남역 인근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여성혐오와 안전에 대한 큰 논쟁을 일으켰다.

3) 우에노 치즈코(2016), “뒤틀린 동맹: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신민족주의와 반동”,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제16회 도시인문학 국제학술대회, “도시적 감정의 양식: 여성혐오와 수치, 테러시대 도시의 불안“ 발표문(2016년 5월 24일); 최병두(2016), ”위기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로“, 한국공간환경학회·서울연구원 공동주관주최 심포지엄 ‘위기의 도시, 희망의 도시’, 2016년 6월 24일

다고 느끼는 걸로 나타났다(안전하다-남:11.7%, 여:7.4%; 불안하다-남46.0%, 여:55.6%). 국가안보, 자연재해, 환경오염, 경제적 위험, 자원고갈, 도덕성 부족, 신종질병,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갈등 등 사회 대부분 분야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덜 불안해했지만, 인재분야는 1.0%, 범죄발생분야는 10.0% 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불안해하고 있었다. 5년 전과 비교해서도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도는 악화되고 위험요인은 강화되었다고 인식했다.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사회의 안전상태를 묻는 질문에 남성들보다는 여성이 더 위험해지며 덜 안전해질거라고 예측하고 있었다(통계청4). 이처럼 동일한 공간인 도시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덜 안전하게 경험하고 더 불안하게 인식하는 것은 도시 자체가 남성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안전한 도시와 일상에 대한 지역 정책 요구

지역차원에서 2014년 대전광역시의 안전 분야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16개 시도(세종특별자치시 제외) 가운데 8위로 나타나 있다. 전국 성평등지수에서 대부분 상위등급을 받고 있는 대전광역시는 유독 안전분야에서만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2010년 10위에서 2014년 7위로,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비율 격차’는 2010년 11위에서 2014년 10위로 약간 선전했지만 여전히 안전분야는 해결해야할 부문으로 남아 있다(주재선·김원홍·김난주·손현민, 20155).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의 불안감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대전광역시, 20146). 2014년 대전의 사회조사에서도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4) 통계청 주제별통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x?vwcd=MT_ZTITLE&parentId=D\(2016년 9월1일 검색\)](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x?vwcd=MT_ZTITLE&parentId=D(2016년 9월1일 검색))

5) 주재선·김원홍·김난주·손현민(2015),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 대전광역시(2015), 2014년 대전의 사회지표

[표 1-1] 2014년 사회안전에 대한 대전시민의 인식

(단위: 점/5점 평균)

	자연재해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화재사고	신종전염병	범죄
남성	3.90	3.60	3.05	3.16	3.17	3.00
여성	3.88	3.55	3.01	3.10	3.10	2.92

자료: 2014 대전의 사회지표, 154쪽 표를 재구성한 것임

지역적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대전광역시도 2014년과 2015년 성주류화전략의 주요한 정책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성평등 목표 가운데 하나를 ‘여성이 안전한 도시 구축’으로 삼았다. 시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교통, 교육, 주거, 이동 등 개인들의 삶이 이뤄지는 도시 전 공간과 정책에 젠더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성평등한 도시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만들려는 노력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 도시의 실질적인 안전을 위한 정책변화를 일으키려는 의도였다. 이와 함께 대전광역시는 2015년 시민안전을 목표로 4개과 12담당으로 구성된 ‘시민안전실’을 신설하면서, 지역과 지역민의 안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요구에 부응하여, 본 연구는 동일한 도시 공간에 함께 살고 있는 남성보다 더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여성들이 원하는 ‘안전’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대전시의 안전정책을 여성의 관점으로 분석한다. 도시에서의 안전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체감되는 것이 아니므로, 안전관련 정책이 중립적이라는 관점에 대한 다르게 보기이다. 여성의 관점과 경험으로 대전시의 안전 관련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연구는 대전시민 모두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제안할 것이다.

제2절 연구방법

1. 문헌 및 자료 분석

- 도시라는 특정 공간에서 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많은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우선 세계 여러 국가와 도시에서 실천되고 있는 ‘안전’ 관련 선언과 현장, 네트워크 등을 소개함으로써 국제적 관점에서 여성의 안전 이슈를 분석했다.
- 여성의 관점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요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도시 발전에 대한 거주민의 다양한 의견, 젠더관점에서 안전과 자유, 평등과 편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탐색을 통해, 도시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해 분석했다.
- 대전시가 2017년에 신설한 시민안전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및 주요 정책과 사업을 파악했다.
- 또한 도시에서 여성의 불안, 최근 문제로 떠오른 여성혐오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언론재단의 종합뉴스DB(www.kinds.or.kr)에서 키워드를 통해 이슈 동향을 분석해 봤다.

2. 기존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분석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전지역에서 수행된 안전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현황을 분석했다. 사업의 성격별로 교육 및 훈련, 시설개선, 대비, 대비 및 복구, 복구, 지역개선, 장비구축, 위생관리, 안전홍보, 거버넌스 등으로 안전분야에서 대해 수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분류했다.

3.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인 [안전기획문화관리]사업의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에 앞서 세부사업의 특성에 맞게 분석을 위한 지표재구성에 대

한 논의를 가졌다.

- 자문회의에서는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지표 재구성과 함께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반영한 안전 분야 정책에 대한 점검, 안전 정책에 대한 성별관련성 파악, 성별 요구의 차이를 반영한 정책개선안 제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했다.

4. 심층 성별영향분석평가

- [안전기획문화관리] 사업에 대해 총 4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했다. [안전기획문화관리] 사업은 안전기획문화총괄 운영,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안전점검 관리 운영, 안전문화운동 포럼 및 세미나 계획,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 지원사업으로 총 5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뤄졌는데,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 지원사업’을 제외한 4개에 대해 이뤄졌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1절 도시와 여성안전에 대한 접근

제2절 도시에서 여성의 권리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1절 도시와 여성안전에 대한 접근

1. 안전한 도시에 대한 여성의 요구

도시에서 안전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는 1970년대 북미지역의 30여개 도시의 여성운동가들이 ‘안전한 밤길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가시화되었다. 특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여성과 도시Femmes et Ville’를 조직하여 도시의 설계에 있어서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여성안전의 이슈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제기한 이슈는 “도시 내 어두운 조명, 버려진 장소, 공터, 덩불, 후미진 곳, 쓰레기장, 상가 등을 밝히는 것과 여성들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을 개선하고 지하철 역사의 입구부분을 개조” 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이었다(주혜진 외, 2015; 유희정 외, 2010: 11-12). 나아가 이들 운동은 2002년 여성안전에 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men’s Safety)를 열고, 몬트리올 헌장(Montreal Declaration)을 발표했다.⁷⁾

7) <http://femmesetvilles.org/conference/>, 2016년 8월 9일

<표 2-1> 몬트리올 헌장의 주요 내용(Montreal Declaration)

대상	내용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과 불안에 대해 말하고 행동하기 - 정책결정과정에서 성평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과 남성을 지지하기 - 성평등을 확장할 힘을 가진 여성을 지지하기
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을 폭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 자율성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을 지지하기 -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통적인 성역할에 도전하기 위해 노력하기
여성단체, 풀뿌리 및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관련있는 기관들과 협력하기, 특히 여성의 특정한 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기
도시와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안전에 여성의 관점을 통합하여 여성의 안전을 지원하는 정책, 계획에 넣고 실천하기 - 안전 감시 등 여성에게 참여기회를 더 제공할 것 - 지역거버넌스와 정책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증대하기 위한 공식적 방식을 마련할 것 - 성평등, 공동체 발전,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할당하고, 지방행정과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 - 좋은 경험과 실천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국제적으로 협력할 것
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과 불안에 징벌적 접근보다는 예방적 접근을 취하기 - 여성에 대한 폭력과 불안에 원인과 영향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포함해 경찰의 조직문화를 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여성의 경험을 교육에 포함할 것 - 여성경찰의 수를 늘릴 것
교육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감수성, 폭력반대, 그리고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통합시켜 젠더를 바탕으로 한 폭력에 대한 태도와 스테레오타입에 젊은이들이 도전하게 할 것 - 모든 교직원에게 젠더교육을 제공하기 - 학교 내외부에 학생주도의 안전감시를 유도할 것 - 모두를 위한 안전한 도시를 목표로 자기방어를 포함해 역량강화전략을 통해 모든 어린이와 십대들을 변화시킬 것

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는 서비스에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것 - 여성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 정보와 인식운동을 통해 젠더스테레오타입과 불평등에 도전할 것 - 자극적인 보도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
연구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설문방법과 과정, 평가방식을 통해 여성의 안전과 범죄예방에 젠더를 통합한 연구를 장려할 것 -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실행과 평가를 지원하고 도울 것
민간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에 대한 폭력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예방의 효과와 이익을 인식할 것 - 노동조합, 여성그룹, 공동체 기관과 협력하여, 여성노동자, 고객,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모든 결정의 효과를 감시할 것 - 여성의 안전을 지향하는 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것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것 - 국가범죄예방 프로그램에 통합적이며,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젠더적 관점을 통합할 것 - 선출된 관리들에게 젠더관점을 교육할 것 -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정부를 지원할 것
국제네트워크와 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안전을 위한 규칙적인 국제 및 지역회의를 지원하기

2. 도시 여성을 위한 유럽선언(Europena Charter for Women in the City⁸⁾)

도시계획에 새로운 철학을 상상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도시에서 여성을 위한 헌장(Charter for Women in the City)’을 위한 제안서를 내놓았다. 도시계획과 서비스, 주택, 이동과 안전 등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종류의 고정관념을 제거함으로써 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은 남성과 여성, 모든 시민의 다른 기대와 필요를 민주적 논쟁을 통해 도시 내 여성을 재사유함으로써 도시를 새롭게 재구조화될 기회를 마련하려는 시도다(Heiler et al, 1994⁹⁾).

새로운 도시철학을 형성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6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는 ‘여성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지연시키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 (removing obstacles which delay a woman’s “right to the city”)’ 이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주택과 주거조건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결정하는 모든 이슈의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통해 도시계획과 삶의 질 향상의 과정에 민주적 결정과정을 활성화시키고, 정책결정자와 시민들이 그들의 일상적 문제에서 “적극적 시민 (active citizenship)” 으로 나가기 위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인식의 공간을 갖게하며, 인간의 가치에 초점을 두고 지역 혹은 도시 계획에 다른 철학을 촉진하고, 새롭고 복잡한 사회에서 적극적 참여자에게 이익이 될 역동적 변화의 감각을 갖도록 하는 것(Heiler et al, 1994: pp.4) 등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 제안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관계가 변화의 시발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복합사회에서 ‘젠더’가 중요한 지점임을 밝히며 아래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첫째,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결정 과정에 동등성 설립하고 둘째, 남성과 여성에 의해 공유되는 새로운 공통의 문화

8) (UN Habitat, 1994), <http://habitat.aq.upm.es/boletin/n7/acharter.html>

9) Heiler, Roland, Mayerl, Roland, Minaca, Monique, Ottes, Liesbeth and Vrychea, Annie(1994), European Charter for Women in the city-Moving towards a Gender-Conscious City (검색일: 2016년 7월 21일, http://www.google.co.uk/url?url=http://www.hic-al.org/documento.cf%3Fid_documento%3D1286&rct=j&frm=1&q=&esrc=s&sa=U&ved=0ahUKEwio5fTR3oPOAhXEi5QKHxqGDM0QFggaMAE&usg=AFQjCNGA8C_ZsktL91OHEJH2C9JkU87jQ)

발전시키는데, 이 경우 젠더 관련한 연구와 관심은 지적 개발의 중요한 핵심으로 삼으며, 마지막으로 도시의 역동을 재건하는데 혁신적 요소로써 남성과 여성의 비전과 인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주장한다. 이와 함께 이 제안서는 12개의 선언을 제안하고 있다.

<표 2-2> 도시여성을 위한 유럽의 선언 12개

선언	내용
선언1) 적극적 시민(Active Citizens)	-도시생활에서 여성의 완전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들은 새로운 방식을 통해 제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적극적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이를 주조해 온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의 결과로 나타나는 여성차별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제도 제거해야함을 의미한다.
선언2) 결정과정 참여와 동등성(Decision Making and Parity in Democracy)	-결정과정에 일부가 된다는 것은 해방에 필수적이다. 도시계획, 공간, 주택, 교통과 환경의 질에 관한 모든 수준의 결정과정에 여성이 참여해야 함을 주장한다. 도시 및 국가계획, 주택정책에서 여성은 늘 적게 대표된다. 지구의 절반인 여성의 재능과 가능성이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의 손실임을 인정해야 한다.
선언3)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ies)	-도시의 안전, 이동, 주택, 도시와 국가 계획에 관한 모든 직종과 교육과 연구, 모든 일터에서 동일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언4) 참여(Participation)	-평등한 참여의 과정은 새로운 연대와 결속을 선호하는 여성을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진정한 평등적 도시민주화는 주거, 노동, 협력적 사회, 문화적 가치, 환경의 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여성도 거주민으로써 다양한 이슈에 참여해야 한다.
선언5) 일상적 삶(Daily Life)	-여성의 관점으로 보여지는 일상의 삶이 바로 정치적 이슈가 되어야 한다. 도시에서 여성의 삶에 대한 관점은 소수자와 비가시화된 그룹과 관련된 불평등에 접근하는 다른 관점을 이끌어야 한다.
선언6)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여성은 우리 지구의 생태학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에 참여해야한다.
선언7) 사회안전과 이동(Social	-모든 여성, 특히 혜택을 못받거나 고립된 여성은 도시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을 영위하기위해 공

<p>Safety and Mobility)</p>	<p>공교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은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밤과 낮, 도시에서 안전은 여성의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사유되어야 한다. 폭력과 공격에 취약한 여성들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이 고립되어 있을 경우,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중으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시민의 이동성 증대를 위한 정책에 이들의 필요가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안전한 도시는 모든 시민, 특히 여성의 이동을 촉진시킨다. 안전감(feeling safe)은 사회통합에 큰 기여를 한다</p>
<p>선언8) 주거와 거주권 (The Right to Housing and Habitat)</p>	<p>여성의 필요에 따른, 지역에서 적절한 공간의 부족은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지고 적극적 시민성을 제한한다. 대체로 공적, 사적 공간은 남성과 남성중심으로 생산되고 계획되어서 여성의 다양한 필요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공공서비스를 비롯한 적절한 주거는 여성의 책임으로 남아있는 집안일을 줄이는데 필수적이다.</p>
<p>선언9) 젠더 이슈 (Gender issues)</p>	<p>도시에서 젠더이슈는 새롭게 공유되는 문화의 원천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새로운 도시와 국가계획철학을 설립하는데 참여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사이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모든 도시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위기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고안하는데 기여했다. 남성과 여성사이의 사회적 관계의 지식의 하나로써 젠더는 다른 관점의 도시생활에 접근하며, 유형화를 제거하는 유익한 도구다.</p>
<p>선언10) 교육과 지역실험 (Education and Local experimentation)</p>	<p>도시에서 젠더이슈는 학교, 건축과 도시계획을 위한 기관, 대학에서 교육해야한다. 만일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도시에서 실험은 긴급하게 필요하다. 연구와 평가는 도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도를 가늠하는데 필수적이다. 도시에서 젠더이슈는 필수적인 지식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서 대학과 칼리지에서 교육되어야 한다.</p>
<p>선언11) 미디어와 미디어전파의 역할 (The role of the Media, Transmitting experience)</p>	<p>미디어는 메시지를 확산해야한다. 이 메시지들은 유형화에 대응하고 그들의 발전과 해방을 반영하는 역할을 보여준다.</p>
<p>선언12) 네트워크(Networks)</p>	<p>유럽연합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환은 현장을 홍보하고 현장의 12개 주장을 시행할 것이다. 정보교환을 위한 유럽연합네트워크(European Networks)는 예방적 프로그램 혹은 태도변화를 위한 필수적 도구이다.</p>

3. 안전한 도시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GNSC: Global Network on Safer Cities, <http://unhabitat.org> 참조)

- ‘안전한 도시를 위한 글로벌네트워크’는 국제연합(유엔인간정주계획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이 도시의 안전을 확산하기 위해, 2012년 9월 이탈리아에서 ‘세계도시포럼World Urban Forum’을 개최하면서 만들어진 계획이다.
- 지역정부 및 도시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도시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범죄와 폭력을 막기 위해 전 세계 24개국의 77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 안전한 도시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목적은
 - 정책입안자와 실행자, 기관과 시민단체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아젠다로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발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정보교환을 장려하고,
 - 도시안전의 강화 및 도시 범죄의 방지에 대한 기준의 표준화를 용이하게 하며,
 - 도시 안전을 위한 장치와 지식을 발전시키고 확산시키며,
 - 도시 안전에 기여할 입증된 접근법을 지원하고,
 - 도시안전에 대한 안젠다를 가시화시킴으로써 도시들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 도시 안전을 확장시키는 자원들을 확대하는 것이다.

제2절 도시에서 여성의 권리

1. 도시에 대한 권리

경제적 세계화로 이해되는 신자유주의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된 이후, 시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의 축소, 공적서비스의 민영화, 복지프로그램의 해체,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도시에 대한 권리’는 세계화의 과정과 도시공간의 상업화의 배제적 과정에 대한 투쟁의 강력한 구호로 등장하고 있다.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에서 소외되는 개인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 가운데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도시운동 혹은 인권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한편으로는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시민권 개념을 재구성하자는 논의로까지 나아가고 있다(Brown, 2013¹⁰⁾).

앙리 르페브르(Lefebvre, Henri)가 모든 도시거주자를 위한 개념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이래로, 도시의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있어서 도시권은 핵심적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다. 르페브르는 도시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도시에 대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는 자본과 국가가 갖고 있는 도시의 통제권을 도시거주자에게 이동시킴으로써 도시의 권력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개념이 된다. 즉 ‘도시에 대한 권리’를 도시생활(urban life)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하는 르페브르에게 도시는 만나고 교환하며, 삶의 리듬과 시간이 사용되는 장소가 된다(Brown, 2013; Fernandes, 2005).

도시의 모든 자원에 접근할 도시민의 권리가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라면, 하비(Harvey, David)는 시민의 욕망을 따라 도시를 변화시킬 권리를 ‘도시에 대한 권리’로 확장한다(Fernandes, 2005¹¹⁾).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함께 나타나는 도시인구의 증가, 도시 외부로 쫓겨나는 빈민층의 증가, 시민적 권리의 박탈 현상(Brenner and Theodore, 2002; 최병두, 2011¹²⁾)과 같은 도시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

10) Brown, Alison(2013), The right to the city: Road to Rio 2010,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37(3), pp.957-971.

11) Fernandes, Edesio(2005), Urban Policies and the Right to the City, Discussion paper, UN-HABITAT,(검색일: 2016년 7월 20일: <http://www.hic-mena.org/documents/UN%20Habitat%20discussion.pdf>)

운 프레임으로 도시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변화시킬 권리로써 하비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의 확장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도시 공간적 시민들의 요청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요구는 새로운 정보의 증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 민주적 참여와 협치에 대한 도시환경과, 계급, 성, 젠더, 장애, 민족, 인종, 나이 등 차이에 대한 정의(justice)에 대한 인식의 성장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확산되고 있는 도시에 대한 새로운 요청과 담론에 대해 에미르 사데르(Emir Sader)¹³⁾는 한때 신자유주의를 위한 특권 받은 영토였던 남아메리카가 지금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대안들을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대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으로, 이것은 남아메리카의 도시사회운동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2001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로(Porto Alegre)에서 열린, 첫 번째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은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순간으로 알려져 있다. 포럼은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도시’를 자본축척과 계층적 분리를 강화하는 일반적 상황의 도시에서 포용과 정의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진 장소로 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¹⁴⁾.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개발 및 관리에 대한 집합적 권리로써 도시권 도입에 대한 법률제정으로 이어졌고, 바르셀로나 같은 도시는 도시권 개념을 기본으로 한 도시헌장과 조례를 제정했다(강현수, 2009¹⁵⁾). 브라질은 2001년 ‘도시법 The City Statute(Federal Law Number 10.257)’을 승인하면서 2003년에는 도시부(Ministry of Cities)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런 브라질의 일련의 노

12) Brenner, Neil and Theodore, Nik(2002), Cities and the Geographies of “Actually Existing Neoliberalism”, in Brenner N. and Theodore, N.(eds), Spaces of Neoliberalism: Urban Restructuring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Blackwell, Oxford, pp2-32

13) Sader, Emir(2008), The weakest Link?-Neoliberalism in Latin America, New Left Review 52, pp. 5-31.

14) <http://www.plannersnetwork.org/2010/07/mexico-city-creates-charter-for-the-right-to-the-city/>, (2016년 7월 26일)

15) 강현수(2009),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공간과 사회, 제32호, 43-90쪽.

력은 깊어지는 도시 내 사회·공간적 분리에 대한 대응이다. 왜냐하면 규모와 상관 없이 세계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부자들은 현대적 기반시설, 개방된 공간, 문화와 스포츠 오락시설로부터 혜택을 보고, 거대한 슬럼가와 주변부 거주지에서 불안한 노동과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살고 있는 빈민층으로 양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도시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브라질의 노력인 썸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서 브라질의 도시법은 1)도시와 도시재산의 사회적 기능의 개념, 2) 도시화의 이익에 대한 공정한 배분, 3) 도시의 민주적 경영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공익을 위해 도시재산의 사용을 규율하는 공적 질서규범과 사회적 관심을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⁶⁾.

몬트리올 헌장(Montreal Charter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¹⁷⁾)의 제 1조는 도시가 모든 시민들의 품위와 관용, 평화와 포용과 평등의 가치를 삶의 공간과 물리적 지역에서 향상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품위는 빈곤과 모든 종류의 차별, 종족적, 인종적, 국적, 사회적 지위, 연령, 결혼 여부, 언어, 종교, 젠더와 성적 지향과 장애 등에 대한 투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헌장은 민주주의, 경제적·사회적 삶, 문화적 삶, 레저·육체적·스포츠 활동,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안전, 지방자치서비스 분야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몬트리올 헌장은 ‘안전’ 분야에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몬트리올 도시가 a)안전한 방식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고, b)여성의 안전을 목표로 구체적인 조치들을 지원하며, c)공원, 커뮤니티 및 오락시설 같은 공공공간에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d)공공의 안전과 시민보호와 같은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를 증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들을 지원하고, e)시민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멕시코도 2010년 ‘도시에 대한 권리를 위한 멕시코 도시헌장 Mexico City

16) The City Statute of Brazil A commentary, (<http://www.ifrc.org/docs/idr/945EN.pdf>, 2016s us 8월 3일자)

17) http://ville.montreal.qc.ca/pls/portal/docs/page/charte_mtl_fr/media/documents/charte_montr_ealaise_anglais.pdf(2016년 8월 3일)

Charter for the Right to the City' 을 발표했다.

도시에 대한 권리를 위한 멕시코 도시헌장 Mexico City Charter for the Right to the City¹⁸⁾

■ 헌장의 목표

- 포용적이고, 살기에 적합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하고, 즐거운 도시를 구성하는데 기여하고
- 사회조직의 발전 과정, 사회구조의 강화, 적극적이며 책임감있는 시민을 구성하는데 기여하며
- 대중적 영역의 경제적 강화와 생산적 첨가를 보장하는 평등하고, 포용적이며, 공동의 도시 경계를 구성하는데 기여하기

■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정의

- 도시에 대한 권리는 지속가능성, 민주성, 동등성, 그리고 사회 정의라는 원칙 내에서 도시의 공정한 사용권을 말한다. 도시거주자의 집합적인 권리로써 도시에 대한 권리는 거주민에게 적절한 삶의 수준과 자유로운 결정할 권리(the Right to Free Determination)에 완전하게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들의 차이와 표현, 문화적 실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행동과 조직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 도시에 대한 권리: 집합적이고 복합적 권리

- 헌장은 개인들이 원하는 도시를 9개로 분류함: 민주적 도시, 포용적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생산적 도시, 교육적 도시, (자연재해로부터)안전한 도시,(폭력으로부터)안심도시, 건강도시, 우호적이며 문화적으로 다양한 도시
- 헌장은 개인들이 원하는 도시를 위한 '도시에 대한 권리의 전략적 기반을 6개로 분류함: 인권에 대한 완전한 행사, 재산과 도시의 사회적 기능, 도시의 민주적 운영, 도시의 민주적 생산, 공유지와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하며 책임 있는 운영, 민주적이고 평등한 도시 즐거움을 즐기기.

18) 도시에 대한 권리를 위한 멕시코 도시헌장의 내용을 번역 요약함.http://www.hic-gs.org/content/Mexico_Charter_R2C_2010.pdf(2016년 8월 1일)

이처럼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 도시 내 정책결정과정은 도시거주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여성을 포함한 모든 도시거주자들이 도시의 교육, 건설, 안전, 문화, 건강, 복지, 교통 등 전 분야의 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여론이 확산되어 왔다. 특히 유네스코와 유엔인간정주계획이 2005년 함께 진행해 2009년 발표한 연구, ‘도시정책과 도시에 대한권리Urban Policies and the Right to the City-Rights, responsibilities and citizenship’는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에 대한 권리’가 도시 변화의 매개체임을 주장하는 연구는 모든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의 시민이 되는, 실질적인 시민권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스스로 정의하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참여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Brown and Kristiansen ,2009¹⁹⁾).

2. 도시에서 여성의 권리

도시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환경이 도시거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도시발전에 다양한 거주민의 관점, 특히 젠더관점에서 안전, 자유, 편리, 평등 등 공간적 정의를 요구하는 연구들이 여성주의와 지리학, 정책학 분야 늘고 있다(남영우, 1997; 윤희린, 2007; 안숙영, 2011, 2012²⁰⁾).

남영우(1997)는 공간점유와 이용은 성별과 관련이 없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시와 여성이라는 주제가 도시와 사회지리학의 주요 연구 분야가 되고 있다고 본다. 특히 기존 도시연구가 성별의 구별 없이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여성이 도시공간의 독자적 이용자 집단이기 때문에, 도시 재구조화 과정에서 계급 및 계층과 함께 여성, 젠더가 주요한 요소임을 인정해야한

19) Brown, Alison and Kristiansen, Annali(2009), Urban Policies and the Right to the City-rights, responsibilities and citizenship, UN-HABITAT(검색일: 2016년7월20일,<http://unesdoc.unesco.org/images/0017/001780/178090e.pdf>)

20) 윤희린(2007), 공간 철학에서 본 아시아의 글로벌 시티, 개발 그리고 여성에 관한 시론, 한국여성학, 제23권 4호, 119-149쪽; 안숙영(2011), 젠더와 공간의 만남을 위한 시론-젠더평등의 관점에서-, 여성학연구, 제21권 제2호, 7-37쪽; 안숙영(2012), 글로벌, 로컬 그리고 젠더-지구화 시대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여성학연구, 22(2), 7-32쪽, 남영우(1997), 도시재구조화와 젠더, 대한지리학회보, 제55호, 1-14쪽.

다는 주장이다.

여성과 장애인, 이주자, 노령자와 어린이, 성적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성희롱과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평화로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가시화되어야 한다(윤혜린, 2007). 이처럼 표준화 된 도시의 재구조화 및 성장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넘어서 여성이 가치있다고 주장하고 동의하는 내용을 얼마나 담아내는가가 도시정책의 주요 아젠다가 되고 있다. 개발과 발전의 관점을 “사람의 선택과 능력에 중심을 두어야 하며, 경제적 성장을 창출하지만 그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환경을 파괴하기보다는 재생시키는 것이고, 남녀 모두를 주변화시키기보다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개발을 말한다. 이 점에서 금세기의 개발은 대체할 수 없는 자연자원과 인간 자원을 보전하고 유지하는 과정으로” (Hall, 2005; 윤혜린, 2007; 124쪽에서 재인용)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여성과 도시발전은 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1994년에는 OECD가 ‘여성과 도시-주택, 시설과 도시환경’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고, 1995년에는 도시여성을 위한 유럽헌장도 만들어졌다. 그 다음해에 유엔인간정주위원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에서 여성의 관심에 중요성을 두는 도시정상회의(City Summit)는 거주프로그램(Habitat Programme)의 기본틀을 만들었다(Hannan, 2007²¹).

1980년대부터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도시정치학에서 젠더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성과 생산 중심의 공간단위(spatial unit of production) 관점에서 벗어나 노동력 재생산 중심의 공간단위(spatial unit of reproduction of labour power)이자 장소로 도시를 사유하고 연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개인들이 매일 일터로 돌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노동력의 재생산’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주택공급, 교통, 요리와 양육같은 가사활동, 생물학적 재생산(출산)을 포함한다. 기존에 성별분업이 고려되지 않은 재생산

21) Hannan, Carolyn(2007),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empowerment of women in cities, http://www.un.org/womenwatch/daw/news/speech2007/CH_stmts/2007%20Promoting%20Women%20in%20Cities%20Korea%20August%202007.pdf, 2016년 8월 9일자)

정치는 도시정책의 실패로 귀결된다고 본다(Bondi&Peake, 1988²²). 따라서 노동력의 재생산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에 주목하고, 노동력 재생산의 실질적 주체인 여성을 도시정책의 주체로 인식해야함을 요청하고 있다(Bondi&Peake, 1988; 조은, 1990²³).

한편 2007년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 슬로건은 “안전한 도시가 정의로운 도시다 A safe city is a just city” 였다. 도시에서의 안전이 여성과 특별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을 표현한 슬로건은 특히, 젠더에 기반한 육체적·심리적·재정적 손해가 여성과 가족, 공동체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협박에서부터 성적학대, 도시 내 이동의 접근성 제한, 취업과 사회서비스, 레저 활동에서 자유를 위축시키는 형태 등 폭력의 형태는 다양하다.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웃, 대중교통, 일터, 학교, 병원 등 사회적 기관에서 여성이 상호작용하는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다. 1990년대 캐나다에서 수행된 연구 따르면, 폭력과 폭력에 대한 위협은 대부분 남성이 주도하고 여성의 60% 이상이 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필리핀에서 수행된 연구는 도시거주와 빈곤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가능성과 높이 연계된 것임을 말해준다(Hannan,2007).

22) Bondi, Liz & Peake, Linda(1988), Gender and the city: urban politics revisited, Little, Jo, Peake, Linda and Richardson, Pat., Women in Cities-Gender and the urban environment.

23) 조은(1990), 공간·계급·여성, 사회비평4, 154-174쪽.

제3절 안전한 도시와 일상에 대한 정책 요구

1. 젠더화된 도시 안전에 대한 인식

2015 한국의 성인지 통계(주재선·송치선·박건표, 2015²⁴)에 따르면, ‘ 전반적인 사회 안전도(Overall Social Stability)’ 는 과거와 비교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여성이 6.8%, 남성이 11.4%였다면, 2014년에 여성은 7.4%, 남성은 11.7%로 증가했다. 그러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건축물과 시설물, 국가안보, 화재와 산불, 식량안보, 신종 전염병 분야에서는 안전하다는 비율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서 줄어들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사회 전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낮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즉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남성보다 더 불안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3〉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Perception of Social Safety)

(단위: %)

	연도	안전하다	
		여성	남성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2012	16.4	21.2
	2014	13.3	17.0
건축물 및 시설물	2012	24.0	28.5
	2014	10.1	14.1
국가안보	2012	29.7	24.4
	2014	12.5	17.5
화재·산불	2012	16.1	19.4
	2014	12.4	16.0
식량안보	2012	32.9	31.5
	2014	23.8	26.3
신종 전염병	2012	11.0	14.9
	2014	7.8	11.1

자료: 주재선·송치선·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72쪽의 <표10-1-4>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한 것임

24) 주재선·송치선·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에 대한 성별비교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20%가량 더 두렵다고 밝히고 있다. 1988년 여성의 66.8%와 남성의 47.0%가, 2001년에는 여성의 64.4%, 남성의 48.2%가 범죄피해를 당하게 될까봐 두렵다고 밝혔다. 2008년에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남녀 모두에게서 급속히 감소했으나,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 범죄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표 2-4>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연도	성별	느낀다
1988	여성	66.8%
	남성	47.0%
1991	여성	67.2%
	남성	46.9%
1997	여성	66.8%
	남성	47.0%
2001	여성	64.4%
	남성	48.2%
2005	여성	67.8%
	남성	47.4%
2008	여성	49.1%
	남성	30.5%

자료: 주재선·송치선·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69쪽의 <표10-1-1>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을 재구성한 것임

범죄의 위협에 대한 인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두려움을 보였다. 2012년 여성의 69.4%와 남성의 58.7%가, 2014년에는 여성의 70.5%와 남성의 58.4%가 범죄의 위협 때문에 불안하다고 표현했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남녀차이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줄어든 반면에, ‘범죄의 위협에 대한 인식’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2012년보다 2014년에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2-5> 범죄의 위협에 대한 인식

연도	성별	불안
2012	여성	69.4%
	남성	58.7%
2014	여성	70.5%
	남성	58.4%

자료: 주재선·송치선·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70쪽의 <표10-1-2> ‘범죄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한 것임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을 묻는 질문에서도 훨씬 많은 여성들이 밤에 걷기가 두려운 장소가 있다고 응답했다. 2014년 여성의 55.5%가 남성의 29.1%가 그렇게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65.2%와 남성의 43.7%가 ‘그냥 다니고 있다’고 응답해 두려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주재선·송치선·박건표, 2015; 471쪽).

도시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시민들의 상당수가 자연재해부터, 화재나 건축물, 전염병, 범죄 피해나 위협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 다만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일상생활에서 불안과 공포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지 여성이라기보다는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와 여성 같은 주변인들이 도시에서 더 많은 불편과 불안을 갖는다. 즉 도시가 특정 범주의 거주민에게 더 편리하고, 특정범주의 거주민에게는 더 불편한 불평등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2. 여성에게 더 불안한 도시

2016년 5월에 발생한 ‘강남역 노래방 살인 사건²⁵⁾’은 온라인에서 여성혐오논쟁으로 번졌는데, 사건의 희생자가 여성 누구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 강력범죄의 피해자의 비율은 여성이 80%이상을 넘고 있어, 안

25) 2016년 5월 17일 새벽에 강남역 인근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살인 사건으로, 여성혐오와 안전에 대한 큰 논쟁을 일으켰다.

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 근거를 말해준다. 실제 자료를 보면, 1995년 강력범죄 피해자의 29.9%를 차지하던 여성은 2000년 71.2%를 넘으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에 81.8%, 2014년에는 84.7%에 달하고 있다(주재선·송치선·박건표, 2015:476).

<표 2-6> 강력범죄²⁶⁾ 피해자 남녀비율

(단위: 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강력	4,553	23,544	3,754	22,381	3,619	25,400	3,552	28,920

자료: 주재선·송치선·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76쪽의 <표10-2-2>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을 재구성한 것임

위의 표가 보여주듯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가 급속히 증가하는 이유는 남성중심으로 젠더화된 사회에서 타자이자 약자인 여성에 대한 배제와 혐오가 전면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적 위기와 함께 도시의 위기²⁷⁾도 온다는 진단은 글로벌화에 따른 경제의 불안정과 심해지는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한 약자에게 향하는 적대화, 성별분업이라는 젠더질서 속에 여성에 대한 혐오도 증가된다는 것이 여성학자들의 분석이다(우에노 치즈코, 2016[2012]).

이와 관련해 한국언론재단이 구축한 종합뉴스DB(www.kinds.or.kr)에서 강남역, 살인, 여성, 혐오를 키워드로 이슈 동향을 분석해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은 더 필요하지만, 여성이나 살인, 강남역 같은 키워드보다는 혐오라는 단어가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대중적 확장성을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26)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를 포함함

27) Harvey, David(2008), The right to the City, New Left Review 54, pp. 23-40(<https://newleftreview.org/II/53/david-harvey-the-right-to-the-city>: 2016년 7월 12일 검색)

[그림 2-1] 키워드로 본 뉴스기사 분석



<표 2-7> 키워드 분석으로 본 기사 수²⁸⁾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강남역	2016	231	187	215	126	1,344	791	169
	2015	318	200	314	261	310	229	235
살인	2016	1,748	1,887	1,811	1,505	3,207	2,641	945
	2015	1,237	2,871	2,430	2,608	2,189	2,459	2,694
여성	2016	9,522	9,471	12,015	11,066	12,814	12,834	4,137
	2015	9,599	10,358	12,092	14,252	14,854	13,294	13,658
혐오	2016	302	319	597	768	1,057	779	383
	2015	295	233	301	598	496	351	426

28) 키워드 분석은 연구자가 한국언론재단의 종합뉴스DB, www.kinds.or.kr에서 직접 키워드를 넣어 재구성한 것임.

제 3 장

대전광역시 안전 관련 정책 현황

제1절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

제2절 대전지역 안전 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제 3 장 대전광역시 안전 관련 정책 현황

제1절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

1. 조직

대전시는 2015년 7월 재난안전 전담기구인 '시민안전실'을 신설, 4개과 12담당(총 66명)으로 구성하였다. 시민안전실은 재난 예방·대비 등 지역재난의 선제적 대응과 시민안전 총괄기능 및 중앙-지방간 재난안전 협조체계 확립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림 3-1] 시민안전실 조직도



자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2016년 11월 기준

시민안전실 4개 부서는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비상대비과, 민생사법경찰과이다. 각 부서의 담당별 주요업무는 <표 3-1>과 같다.

<표 3-1> 시민안전실 4개과 담당별 주요업무

부서명	담당 분야	주요업무
안전정책과	안전정책담당	안전정책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시민안전종합대책 추진, 재난관리기금 운용, 소방안전교부세 업무지원
	안전점검담당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안전관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관리, 시특별 관련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지도,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대책 수립, 취약시설 가스시설 안전점검, 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안전점검, 유원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안전문화담당	안전신문고 및 안전관리 모니터단 운영, 안전점검의 날 행사,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실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안전문화 및 안전체험 인프라 구축 사업, 생활안전지도 제작 및 안전지수 개발
재난관리과	재난대응담당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총괄(사회재난),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재난대응훈련 종합계획 수립, 안전한국훈련 및 상시훈련에 관한 사항, 현장조치 행동메뉴얼 관리, 재난안전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에 관한 사항, 협업기능 관리에 관한 사항, 물자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방재담당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총괄(자연재난), 자연재해 상황 대처에 관한 사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심의, 방재관리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재해위험지구(급경사지 등) 관리 정비, 방재의 날 행사 관련 업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상황담당	각종 재난안전 사건·사고 관리 및 보고, 안전 및 재난상황 동향 파악,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 재난안전상황 대응·관리 매뉴얼 작성, 사회적 재난 상황 관리·보고 및 초동대응 업무, 재난·안전전산망(안전정보통합시스템)구축 운영, 재난 예·경보 구축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비상대비과	비상계획	북한도발 등 국가 비상(전시)대비 업무, 통합방위협의회 및 위기관리실 운영, 북한도발 위협 대비 위기대응반 운영, 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예비군육성 지원업무, 군부대 협력/지원, 관·군 협의회, 안보교육 및 홍보, 충무계획수립 지도, 동원자원관리 및 기술인력동원 관리, 훈련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및 관리, 정부 비축물자 및 충무시설 관리 주민신고망, 취약지관리, 국가 대테러, 방첩업무

부서명	담당 분야	주요업무
	민방위 원자력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및 방호대책 수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유지, 화재방 장비물자 운영관리, 민방위대 동원·편성·검열,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무요원 운영 및 복무관리
	경보 통제	경보통제상황 운영 및 유지관리, 경보가청권 확보 경보시설 구축, 경보단말 이설 및 보안대책 관리, 경보통제관련 사업관리 및 감독, 경보시설 운영관리
민생사법경찰과	수사1	특별사법경찰 업무 총괄 운영 및 계획수립 조정, 특별사법경찰 합동 단속 추진, 대전광역시 자율방법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법용 CCTV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원산지표시·공중위생·의약품·식품접객 분야 단속계획 수립·운영 및 사건 검찰 송치
	수사2	특별사법경찰 계획수립 및 운영,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업, 청소년보호, 환경, 축산물위생 분야 수사, 식품제조유통·청소년보호·축산물위생분야 사건 검찰송치, 환경분야 단속 및 사건 검찰 송치, 7개 지명분야 합동단속 추진

자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2016년 11월 기준

2. 정책

대전시는 2016년 안전도시종합계획을 수립으로 2016년 대전시 안전정책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안전도시종합계획의 정책비전은 ‘안전한 대전, 행복한 시민’이며, 추진목표는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 구현, 안전의식 제고와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이다. 추진전략은 ①분야별 안전대책 수립추진, ②사망자수 등 감축목표제 운영, ③안전교육·체험 및 홍보 강화, ④재난대응 활동 민관협력 강화 총 4가지이다. 추진목표에 따라 계획된 중점 추진과제는 56개 과제이다([그림3-2]참조).

[그림 3-2] 2016년 안전도시종합계획 중점과제

중점과제(56개)					
시기·계절별 안전관리 (11개 과제)	장소별 안전관리 (13개 과제)	기능별 안전관리 (11개 과제)	시민 안전의식 제고 (10개 과제)	4대 사회악 근절 (4개 과제)	소방, 구조·구급 대책 (7개 과제)

자료: 2016년 안전도시종합계획 3p. 안전정책과 내부자료

2016년 각 분야별 세부과제명 및 추진계획은 <표 3-2>와 같다.

<표 3-2> 2016년 분야별 세부과제명 및 추진계획

분야별	세부과제명 및 추진계획	담당부서	추진 일정
<분야 1> 시기·계절별 안전관리 (11개 과제)	1-1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 안전대책 취약시설 사전조사 및 관리자 안전관리 교육실시 등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 운영	안전정책과	2월~3월
	1-2 황사 피해 예방대책 황사 피해예방을 위한 시민행동요령 제작 배포 미세먼지 사전예보제 시행 단계별 근무체계 확립	재난관리과	2월~5월
	1-3 산불 방지대책 봄철 산불 최소화를 위한 산불방지대책 수립 및 예방활동 추진	공원녹지과	2월~5월 11월~12월
	1-4 풍수해 예방대책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추진 풍수해대비 방재교육 실시 여름철 풍수해(가상 태풍)도상 훈련실시	재난관리과	연중
	1-5 가뭄 피해 예방대책 가뭄 종합대책 수립 추진 가뭄대비 시설·장비 현황 및 비상연락망 정비	재난관리과	6월~6월

분야별	세부과제명 및 추진계획	담당부서	추진 일정
	가뭇피해 중점관리기간 상황관리 철저		
	1-6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대책 물놀이 안전관리체계 사전대비 구축 현장중심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응체계 구축·운영	안전정책과	6월~8월
	1-7 전력 수급대책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운영 전력수급 위기 대비 비상단계별 탄력적 대비책 확보 운영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현장 방문 및 상시 현장 점검	에너지산업과	6월~8월
	1-8 폭염 피해 예방대책 무더위쉼터 일제 재조사 및 정비 취약계층 파악 및 재난도우미 확보 시 및 자치구 부서별 T/F팀 구성·운영 대시민 폭염 홍보 활동 강화	재난관리과	6월~9월
	1-9 행락철 전세버스 교통사고 대책 차량 안전점검 특별 안전점검 운송사업자 안전관리실태 점검	운송주차과	2월~5월 9월~11월
	1-10 설해(폭설) 피해 예방대책 상반기 대책기간 운영 재난상황발생시 민+관+군 공동대응 및 응급복구 실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우리동네 눈치우기 지속 추진(봉사활동시간 부여)	재난관리과	10월~ 익년3월
	1-11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구제역·AI 가축방역 상황실 운영 철저한 차단방역 및 소독지원을 통한 AI 비발생 및 구제역 재발 방지	농생명산업과	1월~5월 10월~12월
〈분야 II〉 장소별 안전관리 (13개 과제)	2-1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진단요역 실시 도로구조물 안전 및 유지관리 사업추진 도로시설물 정기·수시 안전점검 실시	시설관리과	연중
	2-2 대형공사장 안전대책 설 명절 대비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 실시	건설 1·2과	연중

분야별	세부과제명 및 추진계획	담당부서	추진 일정
	집중호우(우기) 및 태풍 대비 안전점검 실시 추석명절 대비 안전점검 실시 해빙기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2-3 기타유원시설(키즈카페 등) 안전대책 상반기 안전관리 점검 실시 하반기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관광진흥과	연중
	2-4 유원시설 안전대책 상·하반기 유원시설 합동 안전점검 일반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 자체 및 불시점검	관광진흥과	연중
	2-5 승강기 안전대책 승강기시설 안전점검 실시 승강기 유지관리업 실태조사 2016년 불법운영 승강기 일제점검 2016년 승강기 갑툼사고 승객구조훈련 실시	에너지산업과	연중
	2-6 원자력시설(하나로) 안전대책 갑상선 방호의약품 확충 보급 방사능방재 현장대응역량강화 및 사고대응 전문성장화 훈련실시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용역 추진	비상대비과	연중
	2-7 산업단지 안전대책 해빙기 대덕폐수처리시설 시설물 안전점검 대덕산단 배수펌프장 일제점검 및 가동훈련 대덕산단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대덕산단 폐수처리시설 안전점검	기업지원과	연중
	2-8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대책 2015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현황을 안전관리 정책자료로 활용 특정관리대상시설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재난관련법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특정건축물 지정 및 해제 통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 및 시설물 D/B구축 관리	안전정책과	연중
	2-9 PEB공법구조 건축물 관리대책 건축공사장 해빙기 및 우기대비 안전점검 대상에 PEB공법 건축물 포함 추진	주택정책과	연중
	2-10 급경사지 안전대책	재난관리과	연중

분야별	세부과제명 및 추진계획	담당부서	추진 일정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T/F팀 구성·운영 추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추진 지속적인 수시점검 및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지역 특별관리		
	2-11 시특법 대상 노후시설물 안전대책 안전점검 실시/3회 관리주체 안전점검 추진단 구성·운영(건설관리본부, 시설물 관리주체) 노후시설 전수점검, 관리자 지정, 응급조치 및 중·단기 대책 수립	안전정책과	연중
	2-12 공연장 등 문화시설 안전대책 안전점검 실시 인명피해 위험시설물 해소	문화예술과	연중
	2-13 경기장 등 체육시설 안전대책 안전점검 실시/안전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 시기별 안전점검 실시/ '16년 재난안전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인명피해 위험시설물 해소(해빙기 점검 관련)	체육지원과	연중
<분야 III> 기능별 안전관리 (11개 과제)	3-1 보행자 안전대책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자동차 통행량과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인 보행교통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과 지침 등 마련안전점검 실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교통수단·시설, 안전의식과 제도, 교통사업자 등 교통체계와 교통사고를 줄일시 있는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 운영 (보행환경 개선)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중심의 도시 공간 조성, 보행자 보호 인명피해 위험시설물 해소 (교통사고 취약구간 개선) 교통사고가 빈번한 구간에 대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교통시설 인프라 구축)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신호 시설물 관리, 상습 교통정체구간 개선 등	교통정책과	연중
	3-2 어린이·노약자 교통 안전대책	교통정책과	연중

분야별	세부과제명 및 추진계획	담당부서	추진 일정
	<p>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사고 관리로 맞춤형 교통 안전대책 추진 교통문화연수원 개원,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 및 시민교육 확대 보호구역 정비: 30개소</p>		
	<p>3-3 인터넷 음란물 근절대책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강화로 음란물 범죄 사전 차단·근절</p>	정보화담당관	연중
	<p>3-4 자살 방지대책 자살위기 대응체계 강화 생명존중 사회 마케팅 및 기관 간 협력서비스 연계 강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사업 지속 추진 근거중심 자살예방 조사 연구</p>	보건정책과	연중
	<p>3-5 집단급식소(식중독 등) 안전대책 식중독 발생시 신속보고 및 대응체계 운영 집중관리업소, 식재료공급업소 등 취약시설 관리강화 식중독 예방교육·홍보활동 강화</p>	식품안전과	연중
	<p>3-6 전기 안전사고 대책 주거·생활서비스 시설의 노후로 인한 전기(감전)사고 저감대책 추진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전통시장 전기 안전점검 실시 취약시기 전기안전 강화 대책: 설·명절, 장마철, 동절기 등 영유아시설에 대한 전기설비안전점검 및 전기안전교육 실시</p>	에너지산업과	연중
	<p>3-7 가스 안전사고 대책 도시가스 중점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액화석유가스 충전 및 판매시설 안전관리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p>	에너지산업과	연중
	<p>3-8 위험물 사고 대비 안전관리 위험물제조소 등 정기소방검사(일반·판매·이송취급소, 옥내·외 저장소) 추진</p>	예방안전과	연중

분야별	세부과제명 및 추진계획	담당부서	추진 일정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위험물 운반용기 저장·취급 행위 일제 단속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행위 집중 단속 위험물제조소 등 정기점검 대상 정기점검 이행 안내		
	3-9 지진 피해 예방대책 2016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건축물 외 7종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따른 2016년도 시행계획 수립 홈페이지, 시정소식, LED전광판 등을 이용, 시민행동요령 홍보 실시 민간 건축물 지방세 감면 등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계획: 3개소/ 한밭대교, 동구, 대덕구	재난관리과	연중
	3-10 감염병 안전대책 연중 감염병 기동감시·대응체계 역학조사반 운영 : 6개반(시, 구) 질병 정보 모니터 망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 상시 운영 국가지정음압치료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 확충 메르스 대응백서 발간사업 추진 신종 감염병 발생상황을 감안하여 상시 감염병 감시체계 지속 유지	보건정책과	3월~10 월
	3-11 지역축제장 안전대책 지역축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규모 행사 특별안전관리대책 추진 지역축제 개최시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지역축제장 안전관리책임자 실명 공개(권고)	안전정책과	연중
<분야 IV> 시민 안전의식 제고	4-1 안전문화 의식 향상 맞춤형 안전교육 안전문화교실 운영 대규모 행사 시 연계 안전문화 체험 및 홍보 교육 추진	안전정책과	연중

분야별	세부과제명 및 추진계획	담당부서	추진 일정
(10개 과제)	안전문화운동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안전 생활실천 확산 기회 제공		
	4-2 재난대응 통합연계 훈련 2016년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 수립 안전한국훈련 시행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통보 훈련관련 기획회의, 유관기관 전체회의 실시 안전한국훈련 홍보	재난관리과	연중
	4-3 119 시민체험센터 운영 시민체험센터 활성화로 연간 4만명 안전체험 실현 시민 편의증진의 맞춤형 안전체험 추진 신형 체험차량 도입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활성화	예방안전과	연중
	4-4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개원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목표(70,000명)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목표(10,000명)	기획홍보과	연중
	4-5 화재취약계층·지역 소방안전대책 화재취약계층·지역 주택소방시설 보급 기 조성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소방안전 사후관리 주택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범시민 홍보활동 전개	예방안전과	연중
	4-6 사회계층별 눈높이 소방안전교육 위기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학생중심 안전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2016년도 한국 119소년단 시범학교 선정 및 안전체험 등 추진	예방안전과	연중
	4-7 소방차 통행로 확보(골든타임제) 신호등 제어기 설치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	대응관리과	연중
	4-8 시민과 함께하는 자율소방 안전관리 화재 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실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등에게 피난유도	예방안전과	연중

분야별	세부과제명 및 추진계획	담당부서	추진 일정
	<p>안내정보 제공 자체점검대상에 표본점검 지속적 추진으로 안전관리 강화 자율소방안전관리 리플릿 배부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p>		
	<p>4-9 자전거 안전사고 대책 간선 자전거 도로망 구축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 자전거안전 교통의식 함양: 자전거안전 교육 및 캠페인 자전거보험 가입 :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p>	건설도로과	연중
	<p>4-10 안전문화 캠페인·홍보 강화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체험 한마당 및 홍보전 개최 계절별 시의성 있는 주제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p>	안전정책과	연중
<p><분야 V> 4대 사회악 근절 (4개 과제)</p>	<p>5-1 성폭력 근절대책 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성폭력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성폭력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p>	여성가족청소 년과	연중
	<p>5-2 학교폭력 근절대책 약자보호를 통한 학교폭력예방과 안전한 학습 분위기 조성 학교폭력 제로 교육환경 개선 학교폭력대책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p>	정책기획관	연중
	<p>5-3 가정폭력 근절대책 피해자 지원 365일 24시간 긴급대응체계 구축 시설보호 및 전문가 상담 지원 폭력피해자 자립지원 및 사회적응 여건 조성</p>	여성가족청소 년과	연중
	<p>5-4 불량식품 근절대책 불량식품 근절 감시활동 강화 : 일제점검, 합동점검, 기획단속 등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3개소(서구,</p>	식품안전과	연중

분야별	세부과제명 및 추진계획	담당부서	추진 일정
	<p>유성구, 대덕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구역 내 우수판매업소 확대 지정 ATP(휴대용 세균오염도 측정기) 활용 接客업소 식중독 예방 계도 강화</p>		
<p><분야 VI> 소방, 구조 구급 대책 (7개 과제)</p>	<p>6-1 대덕연구개발특구 소방안전관리 강화 대덕연구개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조직정비 및 운영 활성화 연구실험실 종합소방안전대책 추진</p>	예방안전과	연중
	<p>6-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대책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 추진 화재취약 다중이용업소 선정 표본점검 및 소방안전점검 청구제 운영 활성화 안전픽토그램 활용 등을 통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홍보 강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제도 정착으로 대 시민 안심환경 조성 비상구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통한 안전관리 유지 강화</p>	예방안전과	연중
	<p>6-3 산악사고 인명구조 대책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산악사고 긴급구조구급 출동태세 유지 봄·가을철 주요등산로 입구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악안전사고 예방캠페인 추진</p>	대응관리과	연중
	<p>6-4 테러대응 긴급구조대 운영 활성화 2016년도 테러대응 기본대책 수립·시달 테러취약시설 및 테러이용 가능 위험물질 관리 강화 테러 및 특수재난 전문 위탁교육 강화 및 전문성 제고 국가 위기 상황 대비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국가행사 대테러 총력 대응체제 유지(국내 중요요인 테러·경호안전 지원)</p>	대응관리과	연중
	<p>6-5 건조물 문화재 화재안전대책 건조물 문화재 및 사찰 화재안전대책 추진 건조물 문화재 및 사찰 초기대응시스템 구축</p>	예방안전과	연중

분야별	세부과제명 및 추진계획	담당부서	추진 일정
	<p>6-6 소방특별조사 운영 강화 설 명절 대비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영화관, 여객터미널 지하철 역사, 학원 등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지역 문화재, 숙박시설 학교, 연구실험실, 휴양시설 공장·창고, 공연장, 집회장, 노유자시설, 축제·행사장 다중이용업소, 대형화재취약대상,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p>	예방안전과	연중
	<p>6-7 현장중심의 긴급구조 대응대책 긴급구조대응계획서 작성 배포 현장중심 긴급구조자원 동원 역량조사·평가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재난관리 교육 이수 : 29개 기관·단체 일상적 재난상황에 대한 긴급통제단 운영 능력제고 통제단 부서·개인별 상시 운용능력 배양 : 연중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장비 보강 : 버스, 지휘소 텐트 등</p>	대응관리과	연중

자료: 2016년 안전도시종합계획 토대로 재구성

3. 사업

1) 자연재난관리 부문 추진사업

2016년 대전시의 자연재난관리 부문 사업은 풍수해,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 미세먼지, 녹조, 폭염, 화산재해, 산사태 총 11개 부문에서 이루어지며, 각 부문별로 <표 3-3>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표 3-3> 2016년 대전시 자연재난관리 부문 추진사업

연번	구분	세부사업 명(예산서 상)
1-1	풍수해	저류공원 조성, 생태하천 조성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지방하천 정비, 소하천정비, 고향의 강 하천환경정비
1-2	대설 한파	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계획(제설차량 임차), 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계획(제설장비 구입), 시설장비 유지, 염화칼슘 구입, 수해대책 자재구입
1-3	낙뢰	-
1-4	가뭄	도시 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농촌생활환경정비), 방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생간기반시설정비사업
1-5	지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1-6	황사	-
1-7	미세먼지	대기 오염 측정망 교체
1-8	녹조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환경기초시설 수선 및 교체
1-9	폭염	-
1-10	화산재해	-
1-11	산사태	사방사업(직접), 사방사업(지원)

자료: 대전광역시 2016년 안전관리계획

2) 사회재난관리 부문 추진사업

2016년 대전시의 사회재난관리 부문 사업은 대형화재, 문화재화재, 산불, 건축물 붕괴, 공동구, 지반 침하, 저수지 붕괴, 댐 붕괴, 대중교통, 화물운송, 도로터널사고, 철도교통사고 (도시철도), 내수면 유도선사고, 항공 교통사고, 방사능사고, 유해화학 물질사고, 위험물사고, 생물재난, 대규모 수질오염, 전력(에너지사고), 가스(에너지사고), 석유(에너지사고), 통신망(정보통신사고), 전산망(정보통신사고), 사이버테러, 금융, 의료서비스, 수도(식용수), 환경(폐기물), 하수처리장, 감염병, 가축 전염병, 전시 재난 총 33개 부문에서 이루어지며, 각 부문별로 <표 3-4>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표 3-4> 2016년 대전시 사회재난관리 부문 추진사업

연번	구분	세부사업 명(예산서 상)
2-1	대형화재	119구급장비 확충, 소방통신망 운영관리, 재난대응능력 강화
2-2	문화재화재	목조 문화재전기안전점검, 문화재 무인경비시스템운영, 문화재 돌봄 사업, 문화재 종합관리체계 구축, 문화재 재난방지 구축
2-3	산불	산불방지대책(직접), 산불방지대책(지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2-4	건축물 붕괴	-
2-5	공동구	-
2-6	지반 침하	-
2-7	저수지 붕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2-8	댐 붕괴	-
2-9	대중교통	비상수송차량 행선지 표지판, 대중교통 홍보물, 교통 불편신고 안내스티커
2-10	화물운송	-
2-11	도로터널사고	-
2-12	철도교통사고 (도시철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승강장 안전문 안전시스템 개선사업, 이동식 비상계단 난간 설치, 화재방장장비 소모품, 화재수신기 교체

연번	구분	세부사업 명(예산서 상)
2-13	내수면 유도선사고	-
2-14	항공 교통사고	-
2-15	방사능사고	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사업(환경방사능 측정용역), 합동훈련지원금, 주민보호훈련지원금, 갑상선보호의약품
2-16	유해화학물질사고	-
2-17	위험물사고	비예산
2-18	생물재난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사업
2-19	대규모 수질오염	-
2-20	전력(에너지사고)	-
2-21	가스(에너지사고)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도시가스요금결정 용역
2-22	석유(에너지사고)	-
2-23	통신망 (정보통신사고)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요금, 행정 통신시설 장비 유지보수, 시청사내 정보통신 광케이블공사
2-24	전산망 (정보통신사고)	지역정보화본부 운영, 정보보호시스템운영
2-25	사이버테러	사이버 보안관제 용역 사업
2-26	금융	-
2-27	의료서비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 응급의료지원센터운영 지원 사업,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운영사업,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 사업, 이동응급의료차량장비유지사업
2-28	수도(식용수)	노후관 개량사업
2-29	환경(폐기물)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운영, 단제방 및 차수시설공사
2-30	하수처리장	노후 시설물 수선(교체)설치
2-31	감염병	감염질환역학조사, 결핵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주요표본감시사업, 제1군 감염병 환자 입원, 신종감염병, 국가경리병상유지, 병원감염관리, 감염병전문가교육
2-32	가축 전염병	가축방역약품비, 가축방역 사업지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가축방역 사업추진,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살처분 보상금
2-33	전시재난	비상계획 관리(충무시설 방독면 구입), 을지연습(을지연습 실제훈련 지원), 을지연습(통합방위C4I시스템 구축),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경보통제발령시스템 보수보강

자료: 대전광역시 2016년 안전관리계획

3) 안전관리대책 부문 추진사업

2016년 대전시의 안전관리대책 부문 사업은 이동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 사고, 생활제품, 공원, 구조(등산 활동), 다중이용업소, 물놀이, 수상레저, 도로교통사고, 보행자 안전, 자전거 안전, 사업장 산업재해, 건설 현장 산업재해, 산업단지, 농작업, 연구실, 청사관리, 공연장, 유원시설, 체육시설, 축제장 안전,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자연휴양림시설,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예방, 식품 안전사고, 식중독, 의료제품안전, 소방 안전 교부세, 특별교부세, 재난안전일반사고 총 38개 부문에서 이루어지며, 각 부문별로 <표 3-5>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표 3-5> 2016년 대전시 안전관리대책 부문 추진사업

연번	구분	세부사업 명(예산서 상)
3-1	이동시설	이동시설기능보강
3-2	청소년(수련시설)	유성구 유스호스텔 기능보강
3-3	안전교육	안전체험한마당, 시민안전문화 교육, 안전문화운동 대시민 홍보, 안전문화운동 협업홍보
3-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3-5	승강기 사고	승강기 간힘 사고 승객구조 훈련
3-6	생활제품	-
3-7	공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공원시설물 정비
3-8	구조(등산 활동)	산악구급함 구급약품, 산악구조장비
3-9	다중이용업소	-
3-10	물놀이	여름철물놀이 안전시설설치
3-11	수상레저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운영)
3-12	도로교통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상습 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 교통사고 취약구간 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 정비
3-13	보행자 안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
3-14	자전거 안전	간선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보험금), 안전이용 언론홍보, 자전거 초보자 안전교육
3-15	사업장 산업재해	-

연번	구분	세부사업 명(예산서 상)
3-16	건설현장산업재해	-
3-17	산업단지	배수펌프장 지원, 배수펌프장 시설 정비
3-18	농작업	농업인재해공제료
3-19	연구실	-
3-20	청사관리	시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청사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3-21	공연장	-
3-22	유원시설	-
3-23	체육시설	월드컵경기장 노후 시설 개보수, 한밭체육관 노후 시설 보수공사 외 21건, 건축·토목·기계·전기시설 수선
3-24	축제장 안전	-
3-25	사회복지시설	아동시설기능보강, 노숙인 시설지원, 가정폭력보호시설기능보강,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3-26	요양병원	-
3-27	산후조리원	-
3-28	자연휴양림시설	사방사업, 숲 가꾸기 사업, 만인산 자연휴양림 정비, 장태산 자연휴양림 정비
3-29	가정폭력	예성폭력예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가정·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지원
3-30	성폭력	성폭력예방, 성폭력피해자특별지원, 성폭력상담소운영지원, 가정·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지원,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지원
3-31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참석수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추진, 리더십 인성 캠프사업 지원, 창의미술 교육사업 지원, 학교폭력 예방 가족 힐링캠프 운영,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 견학) 운영, 배움터 지킴이 운영
3-32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 센터운영(광역), 자살예방사업
3-33	식품 안전사고	-
3-34	식중독	식중독예방 대중매체 등 홍보, 식품안전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등
3-35	의료제품안전	다소비의약품 검체수거,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마약퇴치사업

연번	구분	세부사업 명(예산서 상)
3-36	소방안전교부세	정신건강관리실 구축, 정신관리실 운영 물품, 중부소방서 이전 신축, 소방차량보강, 소방차량(특장차) 검사 검수 수수료, 개인안전장비 보강, 소방안전교육장비 보강, 소방안전교육용 소방 펌프구축 및 소화기 교체, 시민대상 소소심 소방안전교육, 소소심 소방안전체험 교육장비 보강, 긴급구조통제단 및 긴급구조훈련 물품, 현장지휘소 운영 물품, 현장상황관리 용품, 긴급구조훈련 운영지원 물품, 긴급구조훈련 안전용품, 긴급구조훈련 음향 및 방송장비 임차, 119구조장비 확충, 화재방테러 및 특수 사고대응장비 확충, 119구급장비 확충, 화재조사장비 확충, 비상소화전 설치,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용품, 심폐소생술 교육용, 출동시스템 보강, 종합수보대 교체, 네트워크(보안)장비 보강, 화재조사 교육 기자재, 노후소방관서 개선 부사119안전센터, 산내119안전센터, 용운119안전센터, 석면제거공사, LED전등교체, 구급차 방역용 소독기, 노후소방관서 개선·본서, 태평119안전센터, 탄방119안전센터, 월평119안전센터, 긴급구조시스템 시설설치, 노후소방관서 개선 석면철거 및 LED설치공사, 범동119안전센터, 덕암119안전센터, 문평119안전센터, 송촌119안전센터, 폐소생술 교육용 장비, 노후소방관서 개선·본서, 구암119안전센터, 도룡119안전센터, 전민119안전센터, 궁동119안전센터, 노은119안전센터, 이동식 빔프로젝트, 노후소방관서 개선·본서, 산성119안전센터, 원내119안전센터, 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도로시설물 안전검사, 도로시설물 보수정비,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3-37	특별교부세	-
3-38	재난안전일반사고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안전점검 관리운영, 안전문화운동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재난대응관리 운영, 방재관리, 방재관리 운영(지원),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 재난상황관리운영, 민방위 교육훈련, 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사업, 안전문화 A확산 및 재난대응 강화

자료: 대전광역시 2016년 안전관리계획

제2절 대전지역 안전 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2012년부터 수행된 안전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수는 총 103건이다. 사업성격별로 분류해보면 교육 및 훈련 12건, 시설개선 7건, 시설관리 16건, 시설설치 14건, 대비 12건, 대비 및 복구 11건, 복구 2건, 지역개선 11건, 장비구축 2건, 위생관리 3건, 안전홍보 3건, 거버넌스 10건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졌다(〈표 3-6〉참조). 안전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7개, 2013년에 31개, 2014년에 17개, 2015년에 38개 안전 관련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수행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양적 성과로 본다면, 연도별 부침은 있지만 대체로 증가세에 있다. 그러나 안전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개선되었는가? 개선된 제도는 성평등에 기여했는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표 3-6〉 2012~2015년 대전지역 안전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사업분류 (과제수)	작성 연도	정책대상_사업명	기관명
교육 및 훈련 (12건)	2013	소방공무원 교육(소방공무원 교육지원)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조 인력 운영(소방 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대전광역시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동구
		민방위 교육 훈련	중구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대전광역시
		민방위운영 내실화(민방위교육훈련)	동구
		민방위 교육 훈련	중구
		민방위 교육장 유지관리	서구
		을지연습	서구
		을지연습	유성구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대덕구
		생활민방위활성화(민방위교육 훈련)	대덕구

사업분류 (과제수)	작성 연도	정책대상_사업명	기관명
시설개선 (7건)	2013	대전천 수해 상습지 개선(국비)	동구
		2014년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서구
		유성천 상류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유성구
		보안등신설공사	대덕구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대덕구
	2015	연료수급관리(가스시설개선)	서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유성구
시설관리 (16건)	2012	가로등정비사업	동구
		가로 보안등 관리	중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서구
	2013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동구
		가로(보안)등 관리	중구
		민방위 시설관리	중구
		가로 보안등 정비공사	유성구
		가로등보안등공원 등 유지보수공사	대덕구
	2014	가로등정비사업	동구
		가로 보안등 관리	중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서구
	2015	가로 보안등 관리(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동구
		가로 보안등 관리	중구
		도로조명 정비(가로등 정비사업)	서구
		가로등 신설 및 정비	유성구
		도시조명관리(도시조명시설 유지보수)	대덕구
시설설치 (14건)	2012	어린이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사업	동구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	중구
		우범지역 조명설치 공사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대덕구
	2013	정보통신망구축운영(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구축 CCTV설치	동구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CCTV설치)	중구
	2014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	동구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	중구
		우범지역 조명설치 공사	서구

사업분류 (과제수)	작성 연도	정책대상_사업명	기관명
	2015	어린이보호구역cctv설치사업	대덕구
		효율적인 통신행정(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CCTV설치사업)	동구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CCTV설치)	중구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CCTV설치)	서구
대비 (12건)	2012	산불방지대책	동구
		선진재해관리시스템구축	대덕구
	2013	재해·재난 사전예방 대비체제 구축	동구
		풍수해보험	중구
	2014	산불방지대책	동구
		선진재해관리시스템구축	대덕구
	2015	지역안전프로그램	대전광역시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산불방지대책)	동구
		재해-재난대비태세 구축(재해·재난 사전예방 대비체제 구축)	동구
		풍수해보험 사업	서구
		수질오염사고대비	대덕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활성화(아동안전지도제작)	대덕구	
대비 및 복구 (11건)	2012	자연 재난관리	대전광역시
		인적재난예방 및 지원 강화	중구
		재해예방 및 복구	중구
	2013	인적재난예방 및 지원 강화	중구
		재해예방 및 복구	중구
		재해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체계 구축	유성구
	2014	자연 재난관리	대전광역시
		인적재난예방 및 지원 강화	중구
		재해예방 및 복구	중구
	2015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대전광역시
		안전예방관리/ 인적재난예방 및 지원	중구
복구 (2건)	2013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대덕구
	2015	재난피해 심리안정지원	대전광역시
지역개선 (11건)	201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유성구

사업분류 (과제수)	작성 연도	정책대상_사업명	기관명
	2013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서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남선근린공원)	서구
	2014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유성구
	2015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대전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구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서구
	2015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유성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유성구
장비구축 (2건)	2013	119구급체제 구축(119구급장비 확충)	대전광역시
		소방통신장비운영관리(긴급 구조 표준 시스템 구축)	대전광역시
위생관리 (3건)	2013	방역소독사업	대덕구
	2015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유성구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대덕구
안전홍보 (3건)	2013	재난 사전운동 확산	동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	중구
	2015	재해위험시설물 관리 및 홍보(재난 사전예방운동 확산)	동구
거버넌스 (10건)	2012	지역자율 방재단 구성운영	동구
		종합재난관리체계 구축(안전모니터 봉사단운영)	서구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 (재난민간단체 운영)	유성구
	2013	청소년 유해환경 지킴이	서구
	2014	지역자율 방재단 구성운영	동구
		종합재난관리체계 구축(안전모니터 봉사단운영)	서구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 (재난민간단체 운영)	유성구
	2015	민방위대 관리	중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	서구
재해 및 재난관리 (재난민간단체 운영)		유성구	

자료: 2012~2015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토대로 재구성

제 4 장

대전지역 안전 통계 정리

제1절 대전지역 안전 관련 통계

제 4 장 대전지역 안전 통계 정리

제1절 대전지역 안전 관련 통계

- 통계로 본 대전시의 안전지수(2013~2015년)

1. 범죄 관련 통계

□ 유형별 범죄발생건수

: 대전시의 범죄발생건수는 전년 대비 1.9% 감소

- 부문별로는 특별법범이 36.6%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절도범(24.0%), 지능범(18.4%), 폭력범(14.4%), 기타형사범(4.5%), 강력범(1.5%), 풍속범(0.4%)의 순.
- 전년대비 기타형사범(147건, 7.4%), 특별법범(471건, 2.8%)의 증가 외에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 주요 범죄 발생건수



(단위 : 건)

연도	계	강력법	절도법	폭력법	지능법	풍속법	기타형사법	특별법법
2000	46,011	619	7,530	6,512	5,364	-	1,168	24,818
2007	51,175	529	8,279	5,724	5,868	-	1,683	29,092
2008	53,124	878	9,349	6,261	6,683	-	1,593	28,360
2009	54,485	779	10,725	7,417	7,036	-	3,414	25,114
2010	49,057	794	10,385	6,219	6,849	716	1,446	22,648
2011	47,472	808	12,800	6,905	7,543	535	1,553	17,328
2012	45,162	709	12,599	6,715	8,259	274	1,800	14,806
2013	48,483	810	11,753	7,022	9,719	231	1,994	16,954
2014	47,565	725	11,426	6,870	8,769	209	2,141	17,425

자료 : 대전지방법경찰청

□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 ‘강도’, ‘상해’에 대해 가장 두려움을 느낌

- 평소 각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강도’, ‘상해’가 각각 5점 만점 평균 2.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폭력’(2.68점), ‘절도’(2.64점)와 ‘사기’(2.64점), ‘성희롱, 성폭력’(2.60점)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2.75점)이 남성(2.56점) 보다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10대 및 30대, 40대는 ‘학교폭력’에 대해 두려움을 많이 느끼며, 20대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구분		범죄피해 두려움(평균)	절도	사기	강도	상해	성희롱, 성폭력	학교폭력
2014		2.66	2.64	2.64	2.70	2.70	2.60	2.68
성별	남성	2.56	2.55	2.58	2.58	2.63	2.42	2.61
	여성	2.75	2.72	2.68	2.80	2.77	2.77	2.75
연령별	15-19세	2.73	2.58	2.57	2.71	2.76	2.87	2.90
	20-29세	2.63	2.58	2.59	2.67	2.67	2.68	2.59
	30-39세	2.79	2.76	2.73	2.82	2.81	2.76	2.87
	40-49세	2.69	2.64	2.64	2.68	2.71	2.65	2.79
	50-59세	2.69	2.70	2.72	2.73	2.74	2.59	2.68
	60세 이상	2.51	2.55	2.54	2.60	2.59	2.34	2.44
구별	동구	2.61	2.62	2.54	2.68	2.66	2.55	2.61
	중구	2.89	2.84	2.81	2.88	2.86	2.92	3.01
	서구	2.67	2.65	2.70	2.68	2.73	2.55	2.71
	유성구	2.53	2.53	2.52	2.61	2.60	2.48	2.46
	대덕구	2.61	2.57	2.56	2.66	2.64	2.59	2.64

자료 : 대전광역시 「2014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 범죄 피해 경험

: 시민의 8.5%는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지난 1년(2013. 9. 1 ~ 2014. 8. 31)간 8.5%가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1.0%가 신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범죄 피해 경험 중 ‘재산피해’ (3.4%)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둑맞거나 빼앗김’ (3.2%), ‘무단침입’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50~59세의 범죄 피해 경험(10.9%)과 20~29세 신고경험(33.6%)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3〉 범죄 피해 경험 및 신고



(단위 : %)

구분		범죄피해 경험		사기(속임) 재산피해		도둑맞거나 빼앗김		무단침입		폭행위협		재산 및 물건 파손		성적 접촉	
		있었다	신고함	있었다	신고함	있었다	신고함	있었다	신고함	있었다	신고함	있었다	신고함	있었다	신고함
2014		8.5	31.0	3.4	23.5	3.2	38.5	2.2	18.0	1.6	25.1	1.3	26.9	0.6	30.5
성별	남성	8.7	32.0	3.6	20.6	3.5	37.5	2.3	20.4	1.6	30.3	1.6	30.0	0.5	34.6
	여성	8.1	28.3	2.8	32.2	2.5	41.9	2.2	12.2	1.4	11.0	0.8	11.9	0.8	24.3
연령별	15-19세	3.6	0.0	1.5	0.0	1.5	0.0	2.2	0.0	1.5	0.0	0.0	0.0	0.0	0.0
	20-29세	7.2	33.6	1.6	46.1	2.6	27.4	1.7	8.5	2.9	41.1	0.9	15.7	1.2	27.3
	30-39세	8.7	28.4	3.5	12.8	3.3	41.7	2.2	29.6	1.8	21.3	1.4	43.4	1.5	36.8
	40-49세	7.5	32.1	2.8	28.3	3.2	37.4	1.2	6.3	1.5	18.6	1.0	35.4	0.2	0.0
	50-59세	10.9	30.4	5.4	21.3	3.9	44.5	2.5	10.2	1.6	21.9	1.9	20.5	0.5	40.2
	60세 이상	7.9	32.0	2.9	26.1	2.8	35.1	3.1	24.4	1.1	28.4	1.3	22.1	0.4	24.8
구별	동구	9.3	28.9	2.7	27.8	4.6	29.7	3.1	26.0	1.5	19.7	0.8	10.4	0.6	16.1
	중구	9.3	39.0	4.1	32.1	3.9	56.2	1.9	24.4	1.1	9.7	1.3	27.9	0.6	18.2
	서구	8.2	20.4	4.0	14.4	2.4	26.5	2.5	5.9	1.1	22.0	1.4	10.4	0.4	20.3
	유성구	9.3	33.7	3.0	21.6	3.1	37.8	1.3	19.5	3.0	23.5	2.3	50.8	1.1	43.5
	대덕구	6.0	49.5	2.5	39.0	2.7	54.8	2.2	29.5	1.3	61.2	0.8	17.7	0.5	48.7

자료 : 대전광역시 「2014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 개인의 범죄피해예방 활동

: 주된 범죄예방 활동은 ‘야간 외출 자제’

- 범죄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야간 외출 자제’ (42.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 또는 친구와의 행선지 공유, 위치 알림 등’ (31.8%), ‘유해사이트 접속 피함’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도 37.7%로 여전히 높게 나타남.

<표 4-4> 개인의 범죄피해예방 활동

개인의 범죄피해예방 활동(1+2순위, %)



(단위 : 1+2순위, %)

구분		야간 외출 자제	위치 알림 등	유해 사이트 접속 피함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범죄 예방 교육	호신장비 소지	기타	별도의 조치 없음
2012		30.6	23.9	9.4	9.8	3.0	6.1	0.0	42.6
2014		42.2	31.8	12.0	8.6	3.8	3.8	0.3	37.7
성별	남성	27.8	25.7	13.6	10.4	4.3	4.0	0.4	46.7
	여성	55.2	37.4	10.6	6.8	3.4	3.6	0.2	29.7
연령별	15-19세	34.0	41.9	17.8	8.5	8.6	8.1	0.4	30.5
	20-29세	36.5	33.8	15.4	11.3	4.0	6.1	0.4	35.8
	30-39세	43.9	34.9	16.5	12.3	3.8	4.3	0.2	31.8
	40-49세	45.8	33.2	14.4	10.0	4.7	3.5	0.2	34.3
	50-59세	41.2	28.9	11.2	7.6	3.2	2.8	0.1	40.4
	60세 이상	43.5	27.0	3.5	3.6	2.1	2.0	0.5	46.3
학력별	초졸 이하	45.6	25.6	1.6	2.2	2.4	2.3	0.4	46.6
	중졸	44.1	29.9	5.6	3.5	2.7	1.8	0.3	43.6
	고졸	42.2	31.3	9.6	7.7	3.9	3.7	0.3	39.1
	대졸 이상	41.0	34.1	17.3	11.6	4.3	4.6	0.2	33.6

자료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각년도

2. 성폭력 관련 범죄

□ 성폭력 관련 범죄의 증가

- 2005년 보다 2010년의 범죄건수 는 3천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강력 및 절도, 지능범죄 건수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볼 때, 강력범 등이 증가하는 것은 대전시민의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표 4-5〉 대전광역시 전체유형별 범죄발생 건수

(단위: 건)

구분	범죄유형						
	계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기타 형사범	특별법범
2010	49,057	794	10,385	6,219	6,849	2,162	22,648
2005	51,155	512	4,954	4,867	6,387	1,214	33,221
2000	46,011	619	7,530	6,512	5,364	1,186	24,818

자료: 2011 대전의사회지표보고서

- 우리지역의 최근 7년간 5 범죄발생 현황에 한 통계를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는 2007년 이후 매년 평균 17.5%가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인 범죄건수도 평균 9.0%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4-6〉 대전광역시 5대 범죄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증가율(%)
계	14,502	16,453	18,871	17,097	20,498	9.0
살인	45	30	53	43	32	-8.2
강도	165	439	312	89	173	1.2
강간	281	371	361	338	535	17.5
절도	8,228	9,351	10,724	10,404	12,822	11.5
폭력	5,723	6,262	7,421	6,223	6,906	4.8

자료: 대전지방경찰청 통계자료실(2012)

- 대전지역의 강력범죄 가운데 강간·강제추행건수는 2011년 19,491건으로 2001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음. 이는 범죄의 자연증가와 새롭게 제정된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추가된 범죄, 그리고 성폭력범죄 신고에 대한 인식확산 등의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음(여성가족부, 2013년).

〈표 4-7〉 전국 강력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건)

구분		2001	2005	2010	2011
계	발생	532,243	487,690	585,637	617,910
	검거	396,885	354,121	415,704	383,538
살인	발생	1,051	1,061	1,251	1,204
	검거	1,076	1,023	1,228	1,154
강도	발생	5,692	5,170	4,409	3,994
	검거	4,670	4,022	3,866	3,385
강간·강제추행	발생	6,751	7,316	18,220	19,491
	검거	6,021	6,441	16,104	16,399
절도	발생	180,704	188,780	269,410	281,359
	검거	78,777	80,725	145,968	112,849
폭력	발생	338,045	285,363	292,347	311,862
	검거	306,341	261,910	248,538	249,751

자료: 대전지방경찰청 통계자료실(2013)

- 최근 5년간 성폭력 발생건수는 2008년 371건에서 2012년 600건으로 크게 증가했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연 증가와 신고율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성폭력발생의 증가는 여성들의 불안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표 4-8> 대전광역시 성폭력 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	9,883	10,215	18,220	19,491	-
대전	371	361	338	535	600

자료: 대전광역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2013)

-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현황은 2008년 54건에서 2011년 29건으로 감소했으나, 성폭력 범죄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심각성을 포함하고 있음. 전 지역의 어린이(0세-12세) 성범죄 피해자 발생건수는 2010년에 47건, 청소년(13-20세) 성범죄 발생건수는 127건으로 증가하고 있음(박노동, 2012).

<표 4-9> 대전광역시 아동·청소년성폭력 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	1,203	1,359	1,922	2,054	-
대전(아동)	54	24	22	29	22

자료: 대전광역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2013)

3. 안전사고와 사회 안전망

□ 화재발생

- 2014년 대전시 화재발생 건당 피해액은 2,614만원으로 이는 대형 공장 물류창고의 화재로 피해액이 높게 산출됨.
- 1천 건당 사망자수는 2014년 3.9명으로, 2014년 대전시 화재발생건수는 전국(42,134건)의 3.1%를 차지함.

〈표 4-10〉 화재발생건수와 화재발생 천건당 사망자수



(단위 : 건, 천원, 명)

연도	연도	발생건수	건당 피해액	천건당 사망자수
대전	2000	1,060	5,068	22.6
	2008	1,550	3,917	6.5
	2009	1,397	3,781	7.9
	2010	1,438	3,998	8.0
	2011	1,352	2,199	2.9
	2012	1,388	3,372	2.2
	2013	1,265	3,293	7.1
2014	1,291	26,138	3.9	
전국	2000	34,844	4,361	15.2
	2008	49,631	7,720	9.4
	2009	47,318	5,323	8.6
	2010	41,863	6,373	7.3
	2011	43,875	5,847	6.0
	2012	43,249	6,694	6.2
	2013	40,932	10,614	7.5
	2014	42,134	9,621	7.7

자료 :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119 구조 및 구급 활동실적

: 119구조 활동은 7,371건, 1일 평균 6.6명 구조

- 대전시 119구조 활동은 2013년 구조건수 7,371건, 구조인원 2,406명으로 1일 평균 6.6명의 인원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1> 119 구조 및 구급 활동실적



자료 : 대전광역시 「대전통계연보」, 소방방재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 구급 이송건수는 2013년 4만4,704건으로 2012년(4만4,592건) 대비 0.3% 증가 하였으며, 이송환자 수는 4만5,610명으로 1일 평균 125.0명의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남.

□ CCTV 설치 수

: 대전시 CCTV는 총 2,295대, 매년 지속 증가 중

- 2013년 CCTV는 총 2,29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2년(1,917대) 대비 19.7%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2〉 CCTV 설치 수



자료 : 대전광역시 CCTV통합관제센터

- 구별로 CCTV 설치 수는 서구(529대)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대덕구(453대), 동구(447대), 유성구(374대), 중구(315대) 순으로 나타남.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보통’ 이상, ‘자연재해’,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인식 크게 상승.

- 사회 안전도에 대해 대부분의 항목이 5점 만점 평균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남.

〈표 4-13〉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점/5점 평균)



(단위: 점/5점 평균)

구분	자연 재해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 사고	화재 사고	식품 안전	정보 보안	의약품 안전	신종 전염병	범죄	
2012	2.91	3.03	2.73	3.00	2.97	3.00	2.97	-	-	
2014	3.88	3.57	3.03	3.13	3.15	2.96	3.25	3.13	2.96	
성별	남성	3.90	3.60	3.05	3.16	3.17	2.97	3.27	3.17	3.00
	여성	3.86	3.55	3.01	3.10	3.13	2.95	3.23	3.10	2.92
연령별	15-19세	3.89	3.58	3.02	3.16	3.21	2.94	3.29	3.19	2.93
	20-29세	4.02	3.67	3.06	3.21	3.25	3.04	3.38	3.22	2.99
	30-39세	3.87	3.51	2.98	3.09	3.07	2.88	3.19	3.04	2.87
	40-49세	3.83	3.56	3.01	3.11	3.10	2.89	3.19	3.09	2.95
	50-59세	3.88	3.57	3.01	3.10	3.12	2.90	3.20	3.13	2.93
	60세 이상	3.83	3.58	3.09	3.16	3.21	3.10	3.29	3.18	3.05
구별	동구	3.87	3.51	3.06	3.15	3.21	3.04	3.33	3.23	2.99
	중구	3.80	3.52	3.04	3.14	3.09	2.93	3.18	3.04	2.87
	서구	3.88	3.59	2.90	3.05	3.17	2.86	3.25	3.07	2.89
	유성구	3.94	3.63	3.19	3.27	3.20	3.14	3.33	3.29	3.14
	대덕구	3.89	3.61	3.09	3.09	3.02	2.90	3.11	3.07	2.94

자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각년도

- ‘자연재해’ (3.88점)에 대한 안전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 (3.57점), ‘의약품안전’ (3.25점), ‘식품안전’ (3.1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정보보안’ (2.96점) 및 범죄(2.96점)는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낮음.

4. 2015 대전의 성인지 통계

□ 대전 교통사고 발생 서구가 가장 많아

- 2014년 대전 교통사고는 총 32,626건(남성 22,403, 여성 10,223)이 발생했으며, 성별 비율은 남성이 68.7%, 여성 31.3%이다. 구별 교통사고 빈도는 서구 10,612, 유성구 6,656, 중구 5,704, 대덕구 4,887, 동구 4,767건 순임.
- 남성은 서구 21.6%가 가장 큰 비율을 보이고 동구가 10.6%로 가장 낮음. 여성도 서구가 10.9%로 가장 높았고, 유성구, 중구, 대덕구, 동구 순임.
- 성별로 보면 남성의 교통사고 비율은 68.7%, 여성 31.3%로 남성이 여성의 두 배임.

□ 성폭력 피해 지원 상담이 가장 많아

- 대전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성폭력 14,187명, 가정폭력 4,163명, 성매매 145명, 학교폭력 65명 순으로 나타났고, 지원건수는 상담 48,588건, 진료 19,241건, 피해자 조서 12,102건, 진술녹화 8,109건, 증거 채취 4,963건, 전문가 참여 2,930건 순임.

□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강도’, ‘상해’가 가장 높아

- 2014년 대전시 시민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인식조사에서 평소 각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강도’, ‘상해’가 각각 5점 만점 평균 2.70점으로 가장 높음.
- 여성(2.75점)이 남성(2.56점) 보다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대전 시민의 45.5%가 식품 안전에 대해 불안

- 대전 시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성별로 살펴보면 ‘불안(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49.4%로 남성 41.5%보다

7.9%p 더 높다. ‘안전하다’ 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4.6%p 높게 나타남.

□ 대전 시민 두 명 중 한명은 신종전염병 때문에 불안하다고 인식

- 2014년 신종전염병에 대한 안전 인식도를 살펴본 결과 대전 시민의 57.2%가 ‘불안(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하다’ 고 응답했고, 여성(60.5%)이 남성(53.7%)보다 불안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제 5 장

대전광역시 [안전기획문화관리] 사업 성별영향평가

제1절 성별영향평가지표

제2절 안전기획문화관리사업

제3절 대전시 안전분야 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제 5 장 대전광역시 [안전기획문화관리] 사업 성별영향평가

제1절 성별영향평가지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전광역시는 2015년 시민안전실을 신설하는 등 시민안전과 안전도시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별 성평등수준에서 안전분야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전광역시는 여성정책 및 도시정책에서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설된 시민안전실이 집중하고 있는 [안전기획문화관리]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대전지역의 안전사업의 현재위치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안전기획문화 총괄운영,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안전점검관리 운영, 안전문화운동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 지원사업 등 총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안전기획문화관리] 사업의 성별영향평가의 목표는 첫째, 일반적 점검포인트에서 벗어나 포괄적으로 사업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젠더관점을 성별영향평가에 반영하고, 둘째는 현재 [안전기획문화관리]사업의 방향과 내용, 방식을 고민하고 새로운 사업 제안이다.

1. 성별영향평가 지표

대전광역시 안전분야 사업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본 연구는 2016년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지표와 대전의 안전문화운동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야를 참고하여 젠더전문가들과의 회의를 거쳐 지표를 재구성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의 틀 내에서 ‘안전’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았다. 성별영향분

석평가의 대상, [안전기획문화관리] 의 세부사업의 주요 범주인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과 건강 포함), 자연재해, 산업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하는 것으로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기존의 안전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다소 일반적인 점검포인트와 분석으로 이뤄졌다는 분석 때문이다. 새로운 관점과 분석의 내용을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이번 연구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표는 대전의 특성에 맞는 젠더 관점이 포함된 안전관련 사업을 제안하거나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점에서 의견이 수렴되었다.

‘안전’ 관련 사업은 지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성별 수혜자 비율이 나오기도 어렵고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서의 성별형평성은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따라서 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①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도, ② 사업내용과 수행방식 등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 5-1> 성별영향평가 지표1: 젠더관점으로 본 남녀의 경제·사회·문화·신체적 요구의 다름

분야	분석점검포인트
사회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강도, 살인, 절도 등과 같은 위험에서 남녀가 인식 혹은 경험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다름으로 인해 본 사업에 대한 요구의 차이 - 먹는 물,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공기오염 등 환경과 관련된 위험에서 남녀가 인식 혹은 경험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다름으로 인해 본 사업에 대한 요구의 차이 - 사회안전 관련 정보 접근에 있어서 남녀가 인식 혹은 경험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다름으로 인해 본 사업에 대한 요구의 차이
생활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 전염병, 질병 등 건강 관련 위험에서 남녀가 인식 혹은 경험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다름으로 인해 본 사업에 대한 요구의 차이 - 교통사고, 길거리 안전 등의 위험에서 남녀가 인식 혹은 경험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다름으로 인해 본 사업에 대한 요구의 차이

분야	분석점검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등의 위험에서 남녀가 인식 혹은 경험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다름으로 인해 본 사업에 대한 요구의 차이 - 생활안전 관련 정보 접근에 있어서 남녀가 인식 혹은 경험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다름으로 인해 본 사업에 대한 요구의 차이
자연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 태풍, 황사, 가뭄, 미세먼지, 지진 등 자연재해와 같은 위험에서 남녀가 인식 혹은 경험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다름으로 인해 본 사업에 대한 요구의 차이 - 자연재해 안전 관련 정보 접근에 있어서 남녀가 인식 혹은 경험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다름으로 인해 본 사업에 대한 요구의 차이
산업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에서 정서적(따돌림, 상사의 폭언, 성희롱 등) 혹은 물리적(상사의 폭행, 불안정한 일터 등) 위험에서 남녀가 인식 혹은 경험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다름으로 인해 본 사업에 대한 요구의 차이 - 산업안전 관련 정보 접근에 있어서 남녀가 인식 혹은 경험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다름으로 인해 본 사업에 대한 요구의 차이

<표 5-2> 성별영향평가 지표2: 젠더 관점에서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분야	조치사항
사업방향	
사업내용	
사업방식	
사업제안	

제2절 안전기획문화관리사업

1. 안전기획문화관리사업 개요

- 사업목적: 본 사업은 대전시민을 위해 안전종합대책과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대전지역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에 관한 모든 상황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지역민 스스로 발굴해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시민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 세부사업: 안전관리계획서 발간,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추진, 안전문화운동 추진 대전협의회 운영지원,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홍보물 제작,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등이 있다.

〈표 5-3〉 안전기획문화관리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주요 세부사업	예산액 (천원)	전년도 예산액 (천원)
안전기획문화총괄 운영	- 안전관리계획서 발간 - 범시민 안전운동 전개 홍보물 제작 - 안전문화운동 추진 대전협의회 운영	79,350	77,585
안심마을만들기사 업추진	- 안심마을만들기공모사업비	78,000	89,250
안전점검관리운영	- 안전점검의 날 운동 홍보물 제작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홍보물 제작	5,924	5,979
안전문화운동 포럼 및 세미나개최	- 안전문화포럼 및 세미나 개최	4,800	9,600

자료: 대전시 내부자료

2. 젠더관점으로 본 남녀의 경제·사회·문화·신체적 요구의 다름

1) 정책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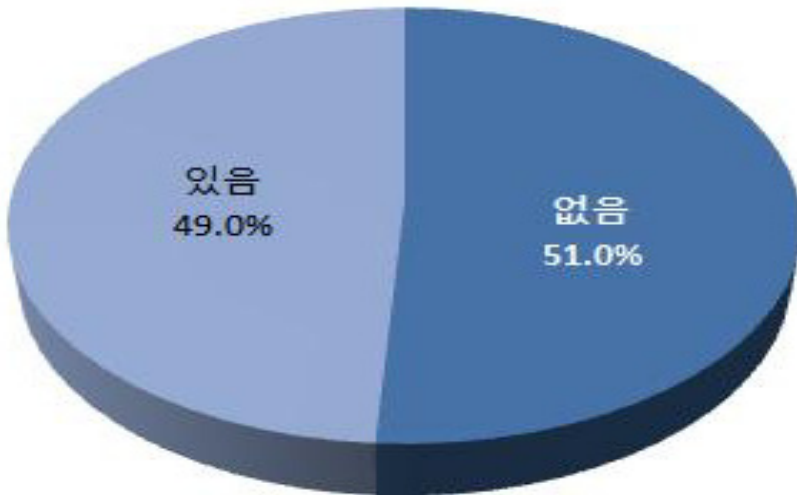
□ 안전과 피해가능성

-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안태운 외, 2014)에 의하면, 재난재해들 중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교통사고>강력범죄>화재·폭발·붕괴>전염병·신종질병·환경오염>자연재해>전쟁·테러·북한의 무력도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과 재난에 대한 관심도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 화재·붕괴, 교통사고, 강력범죄, 전염병 및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에 대한 가능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

□ 안전관련 지식과 능력

- 소화기사용법숙지도, 대피방법 숙지도, 응급처치능력 모두 여성보다 남성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함. 이 부분은 남녀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 안전관련경험과 교육경험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으며, 소화기사용경험, 안전교육 및 훈련경험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나오고 있다.
- 남성의 경우 군대/예비군 훈련, 민방위교육에서 방재역량을 습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교육과 훈련 영역에서 여성의 접근에 한계가 분명하게 예측되고 있다.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2015)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안전교육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의 50%가 재난재해대처능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관련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대처능력이 있다는 응답은 34.8%에 그쳤다. 여성과 남성은 안전교육 경험의 양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습득에서도 다를 수 있으므로 성별 특성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그림 5-1] 재난 재해 안전교육 수혜 경험



자료: 강희영(2015), 포괄적 안전 개념에서 본 서울여성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72쪽

- 안전교육 참가 의향은 남성보다 여성이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난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은 기관이나 회사, 학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 다니지 않고 어떤 단체에도 소속되어있지 않은 전업 주부, 노인, 장애인, 무직자 등은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업주부, 40대 이상 여성 등 안전교육 소외계층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의 실시뿐 아니라 특정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홍보통로의 다각화 방안이 필요하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민의 안전인식와 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2015).

□ 안전 관련 정보 접근성

- 성장과정에서 남성은 재난 재해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취득하는 반면에, 여성은 성폭력, 성희롱으로부터의 안전에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여성의 안전이 폭력피해로부터의 안전으로 축소된다는 점에서 전반적

안전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아 이템을 다양화 시키고 계층별 체험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안전교육 취약 계층으로 나타난 전업주부, 고령 1인가구 등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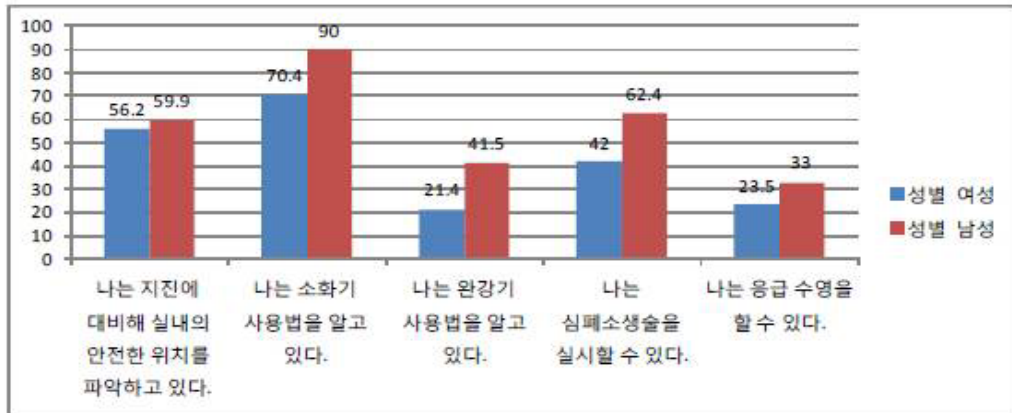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2.26.일 발표한 ‘2013정보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스마트폰 사용율은 74.3%인데 사회취약계층의 사용율은 42.8%로 조사됐다. 일반국민 5500명과 4대 소외계층(2700명) 그리고 신소외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각 600)등 총 1만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일반 국민들과 소외계층간의 정보격차가 pc기반 유선인터넷 환경보다 모바일 환경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뉴스원 2014년 2월 26일 검색).

□ 재난대비 능력의 성별차이²⁹⁾

- 재난에 대비한 능력에 있어서도 남녀 성별의 차이가 조사되고 있다. 지진, 화재, 응급의료 등 전 분야에서 남성들의 재난대응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 강희영(2015), 포괄적 안전 개념에서 본 서울여성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27쪽

[그림 5-2] 재난대비능력



자료: 강희영(2015), 포괄적 안전 개념에서 본 서울여성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연구,

□ 재난시 피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 대비 상대적으로 재난 취약성이 높다는데 대해 전체 72.8%가 동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남성의 동의률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약한 이유로는 ‘신체적 약함’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남성이 이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응답을 보인 취약성의 이유로는 ‘비상상황 시 어린이나 노부모 등(재난취약계층) 동반가족과 함께 있을 가능성이 여성들이 많아서’가 높았고, 이런 이유로 재난취약자를 동반한 사람들(어린 자녀를 둔 여성, 노부모를 모시는 딸 혹은 며느리 등)도 재난취약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전 국민’, ‘재난취약자 동거 가족’, 그리고 ‘재난취약자 본인’ 대상으로 재난안전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90%가 동의했는데, 특히, 여성이면서 30~64세(자녀가 있거나, 노부모를 모시는 연령군)에게서 응답이 높았다.

2) 안전 관련 피해의 남녀 차이

□ 재난안전 영역

- 지난 4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실종자 총 100명 가운데 남녀 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는 2013년부터 추가되어 전체 경향성은 알 수 없지만 2013, 2014년 피해자 모두 40대 이상이었고, 동아시아의 자연재해 피해율에 비해 국내의 자연재해 피해에서 성별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표 5-4> 최근 4년간(2011~2014) 성별·연령별 자연재난 피해자 수

년도	성별	사망 및 실종자수	나이				
			40대	50대	60대	70대	90대
2011	총계	78					
	남	38					
	여	40					
2012	총계	16					
	남	10					
	여	6					
2013	총계	4			2	1	1
	남	3			2		1
	여	1				1	
2014	총계	2	1	1			
	남	1	1				
	여	1		1			

자료: 국민안전처, 재해연보, 2011~2014 자료 재구성

3) 안전 관련법에서 남녀 차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관련 법제에 재난 취약자의 개념이 필요하다(송효진, 2015).

‘Save the children’ 어머니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과 아동이 재난에서 사망할 확률이 성인남성보다 14배 높다고 보고되었다³⁰⁾. 영유아 동반자 여성이 많고, 고령

자중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면 성인지적 관점과 재난 관련 법제에 있어서 ‘재난 취약자’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4) 사회안전 영역의 남녀 차이

- 최근 8년간의 사회재난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자 규모가 늘어나다가 2009년과 2012년 급증하였고, 이후에 줄어드는 추세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회재난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73.1%)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화재(13.9%)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인명피해 현황은 발생건수에 비례하여 대다수가 도로교통사고 91.1%이며, 추락 2.2%, 등산 및 자전거 1.7% 순으로 조사됐다. 사회재난 통계 역시 인적피해에 대해서 전체 발생건수, 사망 부상자수 만 집계되어 있고 재난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통계는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표 5-5〉 최근 8년간(2006~2013) 사회재난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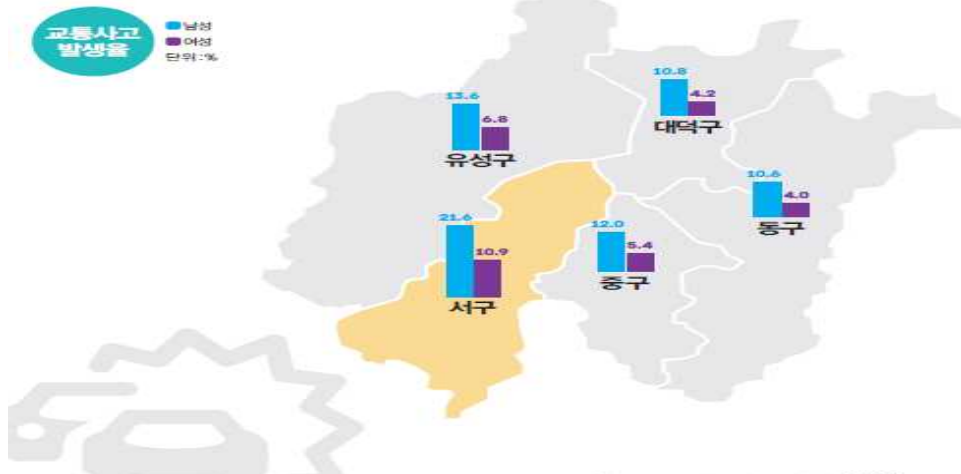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발생건수		256,992	272,090	277,303	292,287	280,607	286,851	303,707	294,707
인명피해	계	357,562	351,657	355,832	376,835	366,911	365,947	383,129	366,610
	사망	8,008	7,849	7,414	7,257	6,758	6,709	7,322	7,147
	부상	349,544	343,808	348,418	369,578	360,153	359,191	375,807	359,444

자료: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 대전시 사회조사(2014)에 의하면 대전지역의 교통사고 발생율은 여성보다 남성의 발생율이 높음. 지역별로는 서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 여성신문 2014년 5월 일자

[그림 5-3]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률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 DB(2014)

- 서울시 소방본부의 사고유형별 구조현황을 통해 안전피해자를 살펴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남성이 58.1%, 여성이 41.9%로 사고유형 전반에 걸쳐 남성의 구조비율이 여성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화재와 교통, 추락, 산악사고 등에서 남녀 간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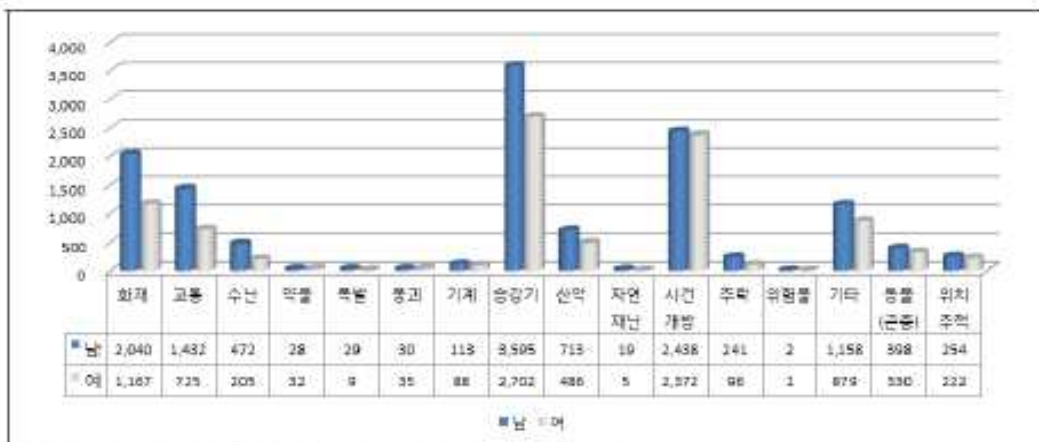
[그림 5-4] 성별 구조 인원



출처: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013 구조활동 실적분석」(내부자료).

- 직업별 구조인원에서는 14세 이상의 학생과 회사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주부로 여성의 경우 주부가 구조 활동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는 중학생과 회사원의 비율이 높다.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고 30대와 50대가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림 5-5] 직업별 · 성별 구조 인원



출처: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013 구조활동 실적분석」(내부자료).

5) 범죄안전 영역에서의 남녀차이

□ 성별에 따른 범죄인식

-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 (45.5%), ‘보통’ (41.2%), ‘안전’ (13.2%)의 순임. 우리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은 ‘범죄 발생’ (29.7%), ‘국가 안보’ (19.3%), ‘경제적 위협’ (15.5%) 순이었다. ‘범죄 발생’ 이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년 전 조사 때보다 10.2%포인트 상승했다.
- 성별로는 남자는 ‘국가 안보’ (22.2%), 여자는 ‘범죄 발생’ (37.3%)이 우리 사회의 주된 불안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밤에 집 근처에 혼자 걷기가 두려운 곳이 ‘있다’ 고 응답한 사람은 40.9%였다. 남자(29.4%)보다 여자(52.2%)가 야간 보행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안전 상태를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안전해졌다’ 고 생각하는 사람은 12.0%에 그쳤다. 5년 후 ‘안전해질 것’ 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15.4%에 머무르고 있다.

〈표 5-6〉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

(단위: %)

	계	범죄 발생	국가 안보	경제적 위협	도덕성 부족	인재	환경 오염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갈등	신종 질병	자연 재해	기타
2014년	100.0	19.5	19.7	9.7	13.0	21.0	5.1	4.0	2.7	4.7	0.6
2016년	100.0	29.7	19.3	15.5	9.5	6.5	5.8	5.3	4.9	3.0	0.5
도시(동부)	100.0	30.1	18.8	16.2	9.8	6.1	6.0	5.5	4.6	2.4	0.5
농어촌(읍면부)	100.0	28.1	21.5	12.4	7.9	8.2	5.1	4.0	6.3	5.9	0.6
남자	100.0	21.9	22.2	17.5	11.3	6.7	5.7	6.4	4.5	3.2	0.7
여자	100.0	37.3	16.5	13.6	7.7	6.3	6.0	4.2	5.2	2.8	0.4

주: 기타에 ‘자원(에너지) 고갈’ 포함
 자료: 통계청, 2016 사회조사

- 본인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범죄유형은 절도가 62.5%로 가장 많았다. 동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유형에 대한 질문에 절도 30.9%, 청소년비행 26.8%로 응답율이 높았다. 본인(14/1%)과 이웃(18.4%)가 범죄피해 경험이 있다.(이창훈, 2015)
- 지역의 범죄 안심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범죄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공동체 활동 환경이 많다고 느낄수록 범죄관련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6] 안전의식



자료: 통계청, 2016 사회조사

○ 생활관련 안심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공동체 활동 환경이 많다고 느낄수록 경찰과 관공서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생활 관련 안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단순히 아는 사람의 수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인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범죄에 대한 안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창훈,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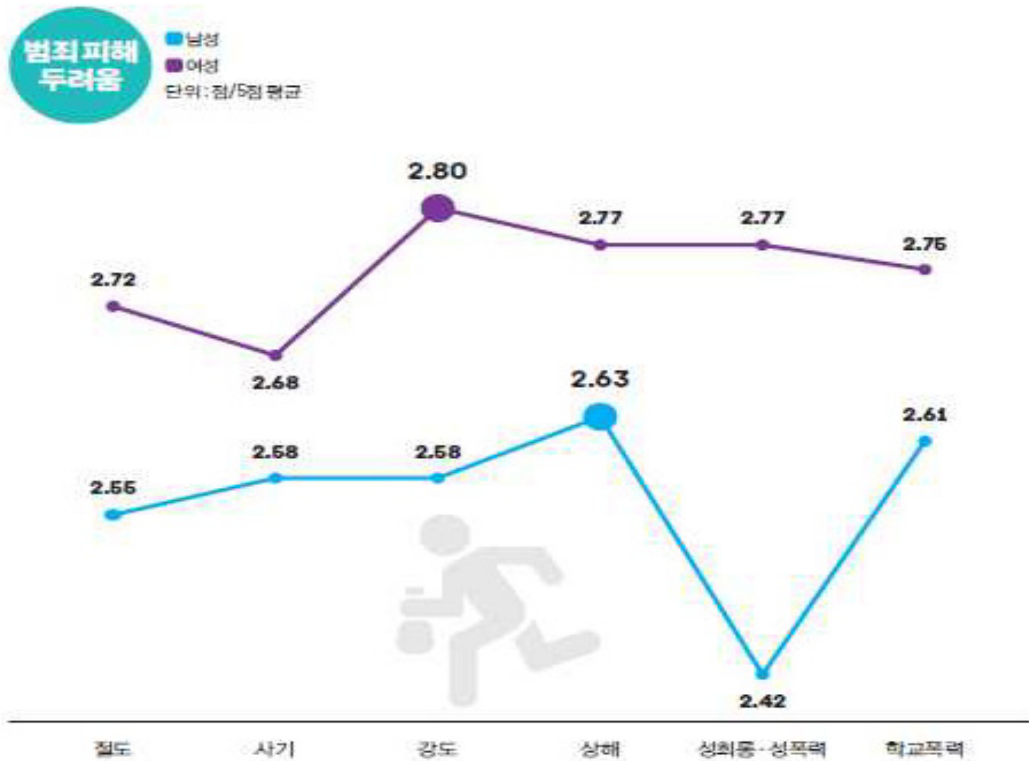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범죄 피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13

년 강력범죄 피해자 현황을 보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3만4126명 가운데 2만8920명(84.7%)이 여성이었다. 남성 피해자는 전체의 3552명(10.4%)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은 여성 비율도 남성을 뛰어넘는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5 범죄분석의 ‘피해결과’를 보면 강력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다. 2014년 기준으로 살인사건으로 숨진 357명 가운데 여성 사망자는 187명으로 과반을 넘었고, 강도사건으로 숨진 여성은 12명, 남성은 8명이었다. 방화사건으로 숨진 여성은 8명, 남성은 6명, 성폭력사건으로 2014년 숨진 희생자는 모두 여성(6명)이었다.

- 범죄 발생률 등은 신고와 인지를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국내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약 10%에 불과했다. 성폭력 범죄 기소율은 2014년 기준 42.2%로, 여성가족부의 ‘2013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토킹, 성희롱, 성추행, 강간 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471명 중 66.6%는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여성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14.4%는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였고, ‘남에게 알리는 것이 두려워서’를 꼽은 경우도 12.8%에 이르고 있다.

[그림 5-7]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자료: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14)

- 대전시 사회조사(2014)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범죄피해두려움이 남성보다 여성이 각 분야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강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으며 상해, 성폭력, 학교폭력, 절도, 사기 순으로 나타남. 반면 남성은 상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으며 학교폭력 강도, 사기, 절도 순이었다.

□ 1인 가구 여성의 고민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혼자 사는 여성의 고민 생활실태조사(2016)에 의하면 혼자 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대해서도 질문했더니 2030세대 여성은 ▲경제적 불안감(26.6%)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26.3%) ▲성폭력 범죄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19.5%) 등을 느낀다고 하였음. 또한 청년 여

성 10명 중 4명(36.3%)은 주거지 불안을 느끼며, CCTV,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와 주거지 내부 계단, 복도 등 은닉 장소가 불안의 주원인으로 나타남. 주거지 유형별 불안정도는 ▲연립다세대(48.8%) ▲고시원/원룸(36.8%) ▲오피스텔(33.2%) ▲아파트(9.8%) 순으로 주거환경의 안심도 차이가 나타났다.

6) 안전 관련 홍보 분야

□ 안전관련 홍보의 필요성

- 안전과 관련된 홍보물제작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의 행정적 정책과 지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기적절하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지식을 얻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 특히, 주제별로 간단하게 제작되어 있는 홍보물의 경우, 관심 주제에 대한 정보의 선택 및 핵심정보에 대한 이해가 쉬울 수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모바일 등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안전관련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현재 안전관련 홍보물

- 현재, 기본안전사항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안전신문고’와 계절별(가을/여름) 나누어 야외활동에 대한 안전 수칙을 제공하고 있으며, 명절(추석/설)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과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안전수칙을 제공하고 있다.
- 기존의 안전 관련 홍보물의 경우, 특정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만 안전수칙을 제공하고 있다. 즉, 안전관련 홍보물이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기존의 특정 시기(계절/명절)은 물론, 시민의 생활 전반에서 고려될 수 있는 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주제별로 홍보물이 제작, 배포되어야 한다.

- 남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요구가 다르다는 점은 안전 관련 홍보물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주제별로 제작된 홍보물을 통해서 서로의 인식 및 경험차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은 물론 상황별로 대처해야 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특히, 안전하지 못한 상황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대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신체적 안전은 물론 정신적인 안정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주제별로-대상별로 다르게 홍보물을 제공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행동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렇게 제작된 홍보물의 경우, 공공기관은 물론 회사에 배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주위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안전과 관련하여 남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요구가 다르다는 점에서 서로의 배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 줄 수 있고 안전과 관련하여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 따라서 안전과 관련된 세부주제를 젠더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회안전/ 생활안전/ 자연재해/ 산업안전 분야로 나누어 상황별-대상별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주요 주제별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문제는 무엇이고, 상호간의 이해가 어려운 상황과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취합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한 다음 관련 정보를 가장 명시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홍보물은 온-오프라인으로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온라인의 경우 정보를 추가-변경하는 등의 업데이트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매달 주제별 안전 홍보물을 제공하고 모여진 정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

- 이렇게 제작된 홍보물은 젠더 별 상호간의 이해력을 증진시켜 상호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 안전문화활동 성과보고

- 안전문화 활동 성과보고에 있어서 추진 목표를 살펴보면, ‘시기별, 장소별 안전관리 정책의 고도화’와 ‘안정생활, 안전의식 강화로 안전위협 요인 제거’이지만, 특정성별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안전문화 활동의 경우, 시기별-장소별 차이는 물론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특히, 통계청에서 11월 15일 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의 경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을 ‘국가안보(22.2%)’로 꼽은 반면 여자는 ‘범죄발생(37.3%)’으로 응답해 성별에 따라 불안요인이 갈리고 있다. 또한 남자(29.4%)보다는 여자(52.2%)가 야간보행에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야간 보행이 두려울 때 절반 이상이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52.3%)’는 방법을 선택했고, ‘낮이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17.2%)’ ‘집앞까지 차를 탄다(13.4%)’는 응답도 많았다.
-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016년 10월 16일 공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5%였고, 남성은 5%였다. 그리고 경찰청의 ‘2012년 이후 보복범죄 연도별 검거현황’ 자료에서도 보복범죄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1277명(92%)으로, 여성(108명, 8%)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게 조사됐다. 이처럼 여성의 경우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실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한 안전문화 활동에 있어서 성별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 특히 안전문화 활동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감정적 공유가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일한 시기나 장소에서도 느끼는 불안감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가 분명했는데, 이러한 불안감에 대한 이해 없이는 모두가 함께 하는 시민운동을 추진 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소통으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안전문화를 만들어가고 민간주도하의 시민운동을 추진한다는 것은 안전문화운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의식은 모든 사고와 위험의 가능성을 없애거나 예방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것으로(최인범, 1998) 안전의식을 함양시킨다는 것은 비의도적 행동을 줄이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대를 증가시키는 것이다(나경환, 2000). 또한 안전의식의 함양은 일상생활 속에서 위험에 대처하는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태도 및 주의력을 기르는 것을 뜻하며, 일상생활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위험 요소를 숙지하고 이를 통제하는 능력이 증가되며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질서 및 안전규칙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이장식, 1997: 이원태, 2009).
- 따라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에서 성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기와 장소에 따른 안전관리 정책은 물론 상황에 따른 개인 및 주변인의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사회안전-안심사회의 테마에서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우수사례 발표

- 안전문화 우수단체(대전 동부 녹색 어머니연합회, 대전 중양동 자율 방범대, 안전문화운동추진 유성구협의회 봉사지원단)의 우수사례 발표에 있어서도 안전문화 운동 실천과제에 성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인지, 구체적인 사례에서 성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자율 방범대의 경우에는 여성의 안전에 관련

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사례들이 보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방법대와 지구대 합동 순찰이외에는 확인 할 수 없었다. 우수사례 선정과 발표에 있어서도 안전문화에 있어서 성차에 대한 배려를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세미나와 포럼

- 세미나와 포럼의 경우 도시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내용으로 거리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줄여 줄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었으나, 특정 성별영향에 대한 논의 보다는 지하철이나 도로 등 장소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따라서 세미나와 포럼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성 성별 영향에 대한 분석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젠더관점에서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 대전시 안전정책에 대한 젠더관점의 개선의견

-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목표로 대전시 시민안전실은 신설되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어느 부처가 주관인지를 찾고 있는 경우도 많고, 재난에 대해 성중립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대전시 시민안전실의 안전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안전도시조례,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

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대전광역시 자율방법대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 현재 대전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는 교차적인 협력체계가 아닌 수직적인 업무중심의 관리체제로, 실제 대전시 안전관련 조례를 조례명을 나열해보면 유사한 조직체계와 조례명칭 등 중복적이며 안전에 관해 조직체계도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 중앙정부에서 요구되는 재난에 대한 안전 대책을 이행하도록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문화운동을 점차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설하여 정책추진을 하고 있지만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안전에 관한 부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과 방향이 시민에게 체감되고 있지 못하다. 최근 발생하는 재난은 복잡하고 대규모이기 때문에 수습과 대응, 복구 단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신속함이 요구되는 현실이지만 이러한 급속도로 변화되는 재난재해 환경과 다르게 행정부서의 업무는 복잡하고 단면적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재난약자, 재난취약계층, 재난으로 인한 시민 내부의 여건을 고려하는 내용은 아직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앞에서 다뤘던 여성의 재난에 대한 취약한 여건 등이 우리지역의 특징과 여성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인지적인 안전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의 안전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재해와 안전에 관한 1년 시기, 장소, 여건을 고려한 사례 책자를 배포하고, 가족과 함께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안전체험, 1인가구 증가에 대비한 안전체험 등 성별,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여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안전에 관한 내용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민관협력의 흐름상 재난안전네트워크 등을 구축하여 대응을 하고자 하지만 실제 각 조직화된 재난관리 참여그룹은 각자의 고유영역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민관협력이라고 하지만 대다수 남성을 중심으로 재난대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성인지적으로 다시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성은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을 넘어 지역 안에서 주민들의 여건을 파악하고, 오랫동안 정주해온 마을을 가꾸고 복원하는데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재난재해에 대한 역량 강화, 젠더전문가들의 소통과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

□ 대전시 안전문화에 대한 젠더접근을 위한 질문

- 안전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보장은 어떠한가?
- 안전에 관한 정보는 생활공간에 어떻게 전달, 제공되고 있는가?
- 안전에 관한 교육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기획되었는가?
- 안전에 관한 성별,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 콘텐츠, 사례로 마련되었는가?
- 안전담당부서의 조례, 계획, 사업, 예산안 수립시 성인지적으로 교차하여 적용했는가?
- 기존 안전 관련 정책의 성역할 고착, 남성중심 방식의 내용은 검토,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는가?
- 안전 정책 결정과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성인지력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 안전에 관한 대응 체계 내 성인지 담당 인력 또는 기구 설치를 하였는가?
- 안전에 관한 성인지적인 사회적 인식 형성을 위해 홍보 등 매체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였는가?
- 안전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시행 과정에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통합하도록 매뉴얼이 작성되고 적용하였는가?

- 안전전담인력, 담당부서 구성원에게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연간 정기적으로 역량강화를 제공하는가?
- 안전정책에 관해 대내외 협력 시 성인지적 관점은 반영되는가?

1) 안전기획문화 총괄운영

□ 사업방향

- 전반적으로 재난에 대비한 예방과 대비방법에 대한 계획보다는 재난발생시 각 부서별 대응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책임질 것인가 하는 업무 분장에 대한 매뉴얼적인 부분이 대부분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행동을 수반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현재 내용이 법령이라면, 법령 시행령, 법령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요구된다.
- 과거 인명 피해는 남녀 구분 없이 처리되어있다. 재해재난 별로 남녀 분리하여 집계하고 가능하다면 연령대를 나누어 집계 되는 것이 향후 재난재해 피해특성을 밝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다.

□ 사업내용

- 자연재난 관리대책 개선안

	현안	개선안
풍수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행동 요령 홍보 · 홍보내용: 대피 시기·장소·요령에 대한 정보 · 의료, 구호, 위생활동을 지원 및 식수, 식량, 생필품 등 구호물자를 전달 받을 수 있는 방법의 홍보 · 언론(TV, 라디오, 신문 등), 전광판, 시·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 	<p>시민행동 요령의 홍보는 재난 이전, 일상시에 숙지토록 교육 및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필품 및 구호물자 공급대책 · 구 생활필수품 등 파악 및 관계기관에 지원 협조요청 · 이재민이 발생하면 구호물자를 동원하여 신속히 응급구호를 실시 	<p>생필품과 구호품에 여성용품, 유아용품, 고령자용품의 포함/ 구호품에는 여성과 영유아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품목들이 추가되어야함</p>

	현안	개선안
	· 구호물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대한적십자사 협조)	
대설 한파	- 제설노선 사전숙지 · 취약지역, 고립 예상지역, 교통통제 예상지역 등	해당 지역과 노선에 대해 일상 시 홍보
	- 설해발생 전 대책: 교통량 및 지역여건 등 중요도에 따른 제설 우선순위설정운영	일반적인 중요도 기준과 함께 보행자, 여성이용자가 많은 지역도 고려
	- 예산현황: 재해예방 및 안전문화활동계획(제설차량임차), - 재해예방 및 안전문화활동계획(제설장비구입)	내용이 적절치 않음,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안전문화활동으로 계획
가뭄	- 가뭄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 지원: 이재민 구호, 중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정부양곡지급 등	
지진	-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여성, 아동, 고령자등 취약계층에 대한 매뉴얼 , 영유아나 노약자를 돌보고 재난발생시 이들과 함께 대피하여야 하는 돌봄자(대부분 여성)가 숙지하여야 할 대피요령에 관한 내용이 필요함
	- 지진방재분야 대국민 홍보-반상회등을 통한 홍보강화	반상회 미실시 가구 많음, 실질적으로 여성, 각 가정과 닿는 홍보수단이나 현실성 낮음. 새로운 홍보수단 강구
	- 지진대피 훈련 실시 · 지진재해대응시스템 훈련 실시/매년 2회 실시	지진대피 훈련 대상자에 일반주민, 30-50대 주부는 해당되지 않음.
	- 공원, 학교,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인구, 지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와 규모의 대피장소 지정	경기도 특정성별에 의하면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용이성, 노약자가 이용가능한 화장실과 세면시설의 설비 등 무장애 공간 여부가 고려되어야함.
폭염	- 현장 밀착형 응급구급 서비스 점검 노숙인, 노유자시설, 공사장, 시민야외 행사장 등	폭염시기는 학교 방학시기와 겹치므로 아동들의 외부 활동이 많음. 시민야외행사장 운영 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함.

○ 사회재난 관리대책 개선안

구분	현재 안	개선 안
대형화재	- p175 대형화재예방교육: 안전체험교실, 이동안전체험차량, 직장인 이용편의	-대형화재가능시설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주거지에서 비직장인의 체험을 도모
	- 범시민적 안전문화조성 및 홍보활동 강화	-on line. off line 다양한 홍보와 활동
	- 피해주민 지원센터 설치 · 운영활성화,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정신적 충격완화를 위한 지원	-남녀특성 파악 후 그에 따라 적절히 구분된 지원이 필요
건축물붕괴	- 복구대책: 피해주민지원	피해주민의 분류, 지원방법의 차별화
	- 반별주요임무: 자원봉사지원반, 자원봉사센터 등의 활동에 관한 현장지원 총괄	자원 봉사자의 성별에 따른 적정활동의 권장
대중교통	- 파업시 대응대책: 비상수송차량대체투입 도시철도연장, 자가용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전개	대중교통은 여성, 서민들이 애용, 파업시 더 큰 영향을 받음. 대책도 주거지, 여성활동영역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철도교통사 고(도시철도)	- 시민참여형 비상대응훈련 및 불시훈련 실시	여성, 아동, 고령자의 상황에 적합한 훈련,
내수면 유도선사고	- 유선장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용 장비 시설 설치 확대-구명조끼 구명환, 무동력 유선장 승객 비상연락망 구축 등	-뿌리공원은 가족 단위 방문객 비율 높음. -다양한 규격의 구명조끼 갖추어야 함. 안전교육: 이용객으로 확대
방사능사고	- 교육 훈련 점검 홍보: 기초단체 주관 주민보호훈련-주민보호역량강화로 사고대응 전문성 강화 및 주민소개훈련	
공원관리(등 산활동)	- 등산로 일정간격 지점 분기점에 위치표지판 설치	-표시의 형태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디자인.
	- 위험지역에 난간, 철책, 로프 등 안전시설 설치	-다양한 신체상황을 고려한 설치

○ 안전관리대책 개선안

구분	현재 안	개선 안
아동 (복지시설 등)	-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시기별 안전대책추진: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대전어린이회관)이용기관까지 확대전파	-남녀 성별에 맞춘 안전대책
청소년 (수련시설)	- 기능보강시 청소년 및 약자(여성, 장애인)를 고려한 리모델링 추진	성별특성을 고려한 리모델링
안전교육	- 세이프 대전 시민안전 체험 한마당 - 안전문화교실 운영 대상: 어린이 학생, 청 장년기, 노인 등	-여성과 주부에 맞춤형 교육
승강기사고	- 승강기 간힘 사고 승객구조훈련: 승강기 이용자 간힘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및 승객구조훈련 실시	-승객훈련 부재, 승객에게 정보 제공(간힘 사고 시 행동 요령)
생활용품	-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교육	-여성, 주부가 사용하는 생활제품이 가장 다양. 이에 대한 교육
공원관리 (등산활동)	- 위치표시판, 위험경고표지판, 안전시설	-인식하기 쉬운 위치표시, 인지성 높은 위험경고표지판, 남녀 신체적 특성에 맞춘 안전시설의 다양화
구조 (등산활동)		-산악사고 통계 성별 분리, 성별 특성에 적합한 구조활동계획 가능
축제장 안전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가족단위 참가자, 아동돌봄 중인 여성의 특성을 파악한 안전관리계획수립
긴급생활안정지원계획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관리 - 긴급생활안정 지원계획 ·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 대피자에 대해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	-이재민 급식시 영유아, 아동 고려하여 구성. -재해구호물자는 남성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

구분	현재 안	개선 안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계획		-자원봉사자의 활동 분야와 지원 물품에 있어서 남녀 특성을 고려.
재난 대응 업무별 훈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국민참여 체감형 훈련 실시(민방위 훈련과 연계) · 다양한 국민 참여 훈련을 기획, 일상 생활주변 재난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대응능력 배양 · 지역별 재난위험을 고려한 ‘민방위 지역특성화 훈련’ 실시 	-소속이 없는 주민, 특히 주부들의 참여가 가능토록 계획

□ 사업방식

- 정책결정체계에 여성 참여 확대 : 정책결정체계에서 안전관리계획에 관련된 위원회(대전안전관리계획서 기준)는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대전 재난안전네트워크, 지방통합방위회의, 지역소방안전대책 협의회, 지역안전대책협의회]로 총 9개다. 계획서에는 일부 위원회만 표기되어 있어서 성별 파악은 어려운 상태이다. 재난대비에서 젠더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된다.
- 교육과 훈련에서 다양한 계층 참여 확대 : 기관이나 기업,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계층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훈련이 가능한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정책 수립 및 결정과정에 여성부서의 참여 확대 :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재난수습홍보반 등의 업무에 있어서 여성가족청소년과, 노인보육정책과, 복지정책과 등 취약계층 및 여성부서와의 협업 필요하다.

□ 새로운 사업 제안

- 대부분의 이주민 수용시설이 주민자치센터나 학교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시설은 계단으로 연결된 지하가 많아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동하기에 불편함. 또한 화장실의 위치, 장애인용 화장실 유무, 남녀 화장실의 변기 수, 환기와 채광 등도 사전에 고려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 재난수습홍보반 역시 공보관만 단독 포함되어 있다. 여성가족청소년, 노인보육정책과의 협업으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여성, 노인, 아동에게 적절한 재난 상황별 국민행동 요령 홍보 및 예·경보 발령사항 등 전파되어 한다. 따라서 기관이나 기업, 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은 계층 및 여성들에 대한 홍보 관련 사업이 필요하다.
- 어린이, 노인, 여성들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2)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 사업방향

- 안심마을 조성사업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한 시민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사업주체로 20인 이상의 서명을 통한 주민조직은 다수시민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 마을 내 주민들의 안전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성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공모형태의 사업이전에 주민들의 모니터링 사업, 주민대상의 사전교육, 컨설팅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과정의 전문성과 주체성을 보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 내 여성들의 공동체 조직 활성화를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단기성 및 배분식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이면서 안전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구별 1500만원으로는 소규모의 사업을 구상할 수밖에 없고 마을의 안전을 위한 효과적 사업을 수행하기에 미흡하기 때문에, 매년 지원지역을 축소하고 좀 더 지속적이고 효율적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안심마을 조성사업이 기존의 안전정책의 일환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CPTED 설치 및 환경 미화식의 정책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 사업내용

- 주민 주도의 안전마을 조성, 지역안전일꾼 활동지원의 경우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점 고려하여 단계별 이들의 역량강화 접근이 필요하며,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가이드라인 수립, 안전을 위한 정보 전달방안을 위한 사업 모색이 필요하다.
- 남성은 재난 재해로부터의 안전이 강조되어 성장한 반면 여성은 성폭력, 성희롱으로부터의 안전에 집중해 온 것도 관련되어 있다. 여성의 안전이 폭력피해로부터의 안전에만 국한된다는 점에서 전반적 안전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재구조화할 필요 있다.
- 사업내용이 주로 가시적 물리적 환경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기존 유사사업들에서 탈피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안전 분야의 사업 아이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안전 사업아이템 개발 필요하다. 취약계층인 장애인,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여성, 전업주부, 노인, 1인가구 등으로 볼 수 있다.

□ 사업방식

- 사업진행 방식에 대한 조치
 - 지역 내 안전 모니터링단을 조직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여기서 새로 만들기보다는 지역 내 존재하고 있는 조직을 활용하는 방식이 좋다. 즉 지역에서 생활안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여성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이들과 함께 하는 사업에 가산점을 주는 조치도 고려해 볼 만하다.
 - 사업 결과 평가에 대한 기준 제시 필요하다.

-소규모 시민들의 사인으로 시민주도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주도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발성 심사항목 개발 필요하다.

-사업의 완결성을 위해 사업공모 전에 주민대상의 사전교육 및 컨설팅을 고려해 볼 만하다.

○ 공모방식 조치

-사업모집공고에서 대상사업 예시 분류기준에서 여성안전과 관련된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예를 들어 생활안전 및 공동체 네트워크 영역(집안 안전, 청소년 안전, 공동체 공간 확보 등) 포함시켜야 한다.

-공모는 20인 이상의 서명이 들어가는데, 이것만으로 마을주민들의 자발성을 입증하기에는 미흡하다.

○ 공모 심사과정 조치

-사업 선정 심사위원의 여성위원 비율 40%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 마을공동체 주도로 사업을 공모한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추천한다.

-사업선발 기준에서 ‘마을 내 안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정도’ 포함 필요하고, 안전관련 사업은 주민들만의 조직으로만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의 내용을 범죄안전, 사회안전, 재해안전 등 한 영역에 치중되지 않게 영역별로 분류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위해 물리적 환경개선 외에 마을 공동체 생성과 활성화 등을 우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사업선정 심사표에 ‘사업추진 파급효과’에 성평등 관련 항목을 첨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안전점검 관리 운영(홍보물 제작)

□ 사업방향

○ 기존의 시기별(계절/명절) 안전 홍보물 제작은 물론, 성별특성을 반영하여 주제별-상황별 안전 홍보물을 온-오프라인으로 제작 배포해야 한다.

□ 사업내용

- 세부주제는 안전과 관련된 세부주제를 젠더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회안전/ 생활안전/ 자연재해/ 산업안전 분야로 나누어서 주제별 인식의 차이와 상황별 대응전략을 홍보물로서 간략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관련 주제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문제는 무엇이고, 상호간의 이해가 어려운 상황과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취합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한 다음 관련 정보를 가장 명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업방식

- 온-오프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든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을 고려해야한다.

□ 새로운 사업 제안

- 기존의 시기별(계절/명절) 안전 홍보물 제작은 물론, 성별특성을 반영하여 주제별-상황별 안전 홍보물을 온-오프라인으로 제작 및 배포해야 한다.
- 주제는 안전과 관련된 세부주제를 젠더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회안전/ 생활안전/ 자연재해/ 산업안전 분야로 나누어서 주제별 인식의 차이와 상황별 대응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안전문화운동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사업 개요

□ 사업방향

- 2015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총회 및 세미나의 안전문화 활동 성과보고에 있어서 특정성별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안전문화 활동의 경우, 시기별-장소별 차이는 물론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성차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사업내용

- 안전문화 활동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감정적 공유가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일한 시기나 장소에서도 느끼는 불안감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가 분명했는데, 이러한 불안감에 대한 이해 없이는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운동을 추진 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소통으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에서 성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기와 장소에 따른 안전관리 정책은 물론 상황에 따른 개인 및 주변인의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사회안전-안심사회의 테마에서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 사업방식

- 안전문화 추진 협의회의 추진전략에서부터 성별 차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사회안전-안심사회의 테마에서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제시되어 시민단체는 물론, 총회 및 세미나에서도 관련 대응전략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사업제안

- 2015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총회 및 세미나의 안전문화 활동 성과보고에 있어서 특정성별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안전문화 활동의 경우, 시기별-장소별 차이는 물론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성차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안전관련 성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문화 추진 협의회의 추진 전략은 물론, 사회안전-안심사회의 테마에서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제시되어 시민단체는 물론, 총회 및 세미나에서도 관련 대응전략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3절 대전시 안전분야 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본 연구는 지역민들의 생활공간인 도시에서 최근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젠더화된 도시의 안전상황에 대한 시민의 인식으로 보았다. 따라서 안전한 도시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를, 젠더관점을 안전 분야에 포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는 도시안전이 시민 모두의 요구이라는 이름 아래, 안전 정책의 수립 및 사업실행의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지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를 포함한 여성의 관점에 집중했다.

□ 여성의 권리로써 안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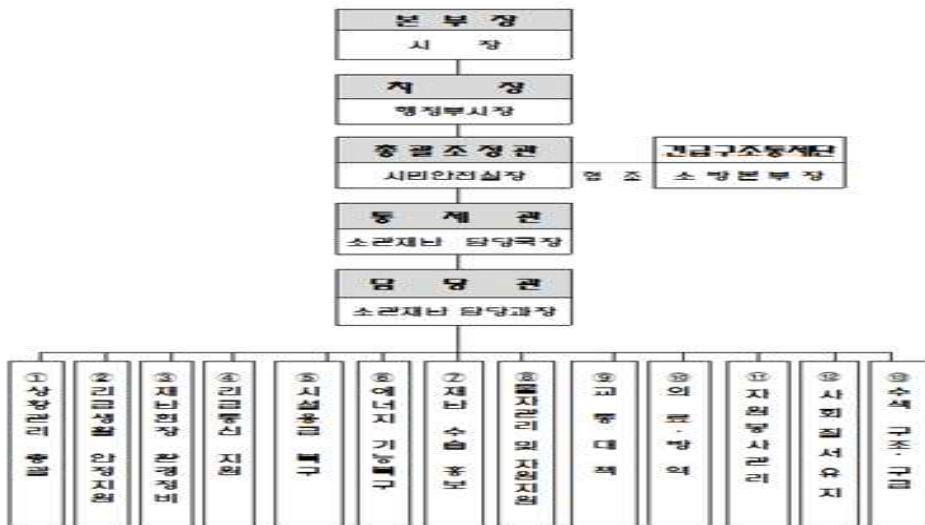
도시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성별의 구별 없이 ‘주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여성의 관점을 소홀히 다루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이 도시공간의 독자적이며 주요한 이용자임을 고려하여 도시재구조화 과정에서도 계급과 계층과 함께 여성을 특정 범주로 인정하고 있다. 여성과 장애인, 이주자와 노령자, 어린이, 그리고 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성희롱과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등을 제거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다양한 주체들을 인정하고 가시화하는 노력들이 도시정책의 주요한 아젠다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아젠다가 아젠다에 머물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거주공간에서의 평화롭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이 권리임을, 특히 범죄피해나 각종 재난에서 상대적으로 피해위험이 높고, 교육받을 기회, 훈련의 기회가 적은 여성의 권리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전지역의 안전 관련 협의회 및 위원회에는 여성전문가를 비롯해 여성의 참여가 미약하다. 정책의 수립과정에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담기 위해서는 여성 및 여성 관련 공무원, 종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 즉 정책결정, 법적 근거, 계획과 사업, 예산 집행 등에서 젠더관점이 통합되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한 주체로서 정부-연구자-시민사회-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적 방안을 재점검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 안전관련 조직 정비

대전광역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이뤄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각각의 활동이 여러 부서와 연결되어 있어, 실제 재난 시 각 분야가 각 부서와 어떤 의사소통체계와 협력작업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작동될 지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상황관리총괄반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입력, 재난 진행 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활동지원, 특별지시사항 처리 및 상화관리에 필요한 상황,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복무단속 등 기타 행정지원을 일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부서는 재난관리과/사회재난(재난대응담당), 자연재난(방재담당), 재난수습부서, 총무과, 감사관실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조직과 기능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즉 일반적인 재난에 대비한 예방과 대처방법이 아니라 재난발생시 각 부서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어떤 대응방식을 펼쳐야하는가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명시와 분장이 필요하다.

[그림 5-8]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



자료: 대전광역시 2016년 안전관리계획, 37쪽

□ 안전 관련 성별분리통계와 연구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난 후 불안 장애 등 정신적 외상이 높은 차이가 발생하지만 가족의 위생과 건강은 보통 여성이 관리하는 부담과 성역할 고착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삶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는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과 취약계층 등 시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다. 따라서 대전시 사회조사에서 다뤄지지 않는 안전과 관련한 여성의 경험, 관점, 요구를 포함해, 자연/사회재난의 예방, 현장 대응, 재난복구 시기, 사후 재난 대비관리, 교육과 훈련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실제 서울여성가족재단이나 경기여성가족원 등 타 시도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뿐만 아니라 조사와 통계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도시 정책에 여성 및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 안전관련 조례 재정비

앞서 말했듯이, 대전시에는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를 비롯해 19개 이상의 안전 관련 조례가 있다. 세분화된 조례로 인해 실제 재난상황에 어떤 조례를 적용해야 할지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조례를 범주별로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한편, 실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재난의 종류가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재난에 대한 각각의 조례를 보다는 특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역적 차원에서 어떤 방식의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도 고려되어야 한다.

□ 젠더관점의 안전 관련 홍보와 교육의 확대

도시안전은 사후관리보다 사전예방이 효과적이며, 사전예방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홍보와 교육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홍보와 교육이 성중립적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이는 젠더전문가들의 견해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교육이기 때문에 젠더관점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사실 지배적이다. 그러나 앞서 여러 연구와 통계가 보여주듯이, 안전 관련 교육에서 여성의 접근성이 떨어지

고 참여율이 적은 이유와 대비능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떨어지는 이유, 여러 재난에서 여성의 피해가 남성보다 큰 이유는 성별관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함을 설명한다. 따라서 재난안전 관련 법령, 재난행동 요령 및 매뉴얼, 교육훈련 교재와 교육과정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노력을 필요하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고령층이나 장애인,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 및 남성들을 위한 맞춤형 재난대비 훈련 프로그램은 필요하다.

□ 안전교육의 문제

〈표 5-7〉 대전시 교통안전교육 현황

구 분	합계	'14	'15
합 계	136,773	71,061	65,712
어린이	56,240	30,973	25,267
초·중·고등학생	21,542	8,291	13,251
성인	58,991	31,797	27,194

자료: 2016년 안전관리계획, 358쪽

〈표 5-8〉 대전시 소방안전교육 현황

구 분	합계	'14	'15
합 계	279,772	115,139	164,633
어린이	52,929	19,653	33,276
초·중·고등학생	122,152	46,580	75,572
성인	104,691	48,906	55,785

자료: 2016년 안전관리계획, 358쪽

안전교육과 관련해 통계와 교육내용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교통과 소방안전 이외의 전기, 가스, 승강기, 폭력 등 생활안전과 산불과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

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교육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편차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대처를 위해 다양한 분류통계가 필요하다.

□ 이재민 수용시설

〈표 5-9〉 이재민 수용시설 형태

계		수용시설형태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132	30,684	79	26,406	1	40	37	1,667	1	270	14	2,293

자료: 2016년 안전관리계획, 77쪽

대전시 이재민 수용시설은 학교와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대부분이 계단으로 연결된 지하가 대다수로 휠체어를 이용해야하거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약점을 갖고 있다. 또한 화장실의 위치, 장애인 화장실의 유무, 남녀 화장실의 변기수, 환기와 채광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성별에 따른 재난 구호물품의 준비

〈표 5-10〉 재난 구호 물품

계	응급구호세트	재가구호세트	천막(조)	모포침구(점)	비축장소(개소)
1,613	452	110	65	981	5

자료: 2016년 안전관리계획, 77쪽

○ 구호물자는 응급구호세트와 침구 등으로, 생리대와 같은 여성용품,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나 수유 중인 가족을 대비한 내의 및 수건, 담요 등 성별특성을 고려해 구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부처별 재난, 안전 업무 협조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서의 역할과 법적 근거 필요

- 긴급구조지원에서 재난피해여성과 이들이 동반한 영유아, 어린이 및 고령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긴급한 피해가족지원, 긴급돌봄지원 과정에 여성가족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현수(2009),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공간과사회 제32호), 한국공간환경학회
- 강희영(2015), 서울시 안전정책에서 젠더 관점의 필요성과 가능성(이화젠더법학 제7권 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경찰청(2012), 2012년 경찰통계연보
- 남영우(1997), 도시재구조화와 젠더, (대한지리학회보 제55호), 대한지리학회
- 대전광역시(2011), 2011 대전의 사회지표
- 대전광역시(2012), 2012 대전의 사회지표
- 대전광역시(2013), 2013 대전의 사회지표
- 대전광역시(2014), 2014 대전의 사회지표
- 대전광역시(2015), 2015 대전의 사회지표
- 대전광역시(2011), 대전통계연보 2011(제50회)
- 대전광역시(2012), 대전통계연보 2012(제51회)
- 대전광역시(2013), 대전통계연보 2013(제52회)
- 대전광역시(2014), 대전통계연보 2014(제53회)
- 대전광역시(2015), 대전통계연보 2015(제54회)
- 대전발전연구원(2011), 대전여성가족통계
- 대전발전연구원(2012), 대전여성가족통계
- 대전발전연구원(2013), 대전여성가족통계
- 대전발전연구원(2014), 대전여성가족통계
- 대전발전연구원(2015), 대전여성가족통계
- 대전지방경찰청, 대전경찰통계자료실(2012년)
- 대전지방경찰청, 대전경찰통계자료실(2013년)
- 박노동(2012), 어린이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방안, 대전발전연구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6), 2016 1인 여성가구 생활실태조사
- 소방방재청(2013),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 송효진(2015), 젠더 관점에서 본 재난안전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화젠더법학 제7권 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안숙영(2011), 젠더와 공간의 만남을 위한 시론 : 젠더평등의 관점에서(여성학연구 제21권 제2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 안숙영(2012), 글로벌, 로컬 그리고 젠더 : 지구화 시대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여성학연구 제22권 제2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 여성가족부(2015),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우에노 치즈코(2016. 6. 24), “튀틀린 동맹: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신민족주의와 반동” (도시적 감정의 양식: 여성혐오와 수치, 테러시대 도시의 불안 발표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제16회 도시인문학 국제학술대회
- 윤혜린(2007), 공간 철학에서 본 아시아의 글로벌 시티, 개발 그리고 여성에 관한 시론(한국여성학 제23권 4호), 한국여성학회
- 이창훈(2015), 표류하는 안심마을 사업 : 사회적 자본이 주민안심도 및 지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경찰연구학회
- 조은(1990), 공간·계급·여성: 재개발지역 사례연구에 대한 한 페미니스트의 후기(사회비평 제4권), 나남출판사
- 주재선·송치선·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혜진·배지연(2013), 대전시 여성의 생활안전보호와 지역거버넌스 구축방안, 대전발전연구원
- 최병두(2016. 6. 24), “위기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로” (위기의 도시, 희망의 도시 기초발표문), 한국공간환경학회·서울연구원 공동주관주최 심포지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 Brown, Alison(2013), The right to the city: Road to Rio 2010,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37(3), Wiley-blackwell
- Fernandes, Edesio(2005), Urban Policies and the Right to the City, Discussion paper, UN-HABITAT, <http://www.hic-mena.org/documents/UN%20Habitat%20discussion.pdf> 검색일: 2016년 7월 20일
- Brenner, Neil and Theodore, Nik(2002), Cities and the Geographies of “Actually Existing Neoliberalism” , Antipode Vol. 34 No. 3, Blackwell Publishers
- Sader, Emir(2008), The weakest Link?-Neoliberalism in Latin America, New Left Review 52, <http://www.plannersnetwork.org/2010/07/mexico-city-creates-charter-for-the-right-to-the-city/>, 검색일: 2016년 7월 26일
- Brown, Alison and Kristiansen, Annali(2009), Urban Policies and the Right to the City-rights, responsibilities and citizenship, UN-HABITAT,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7/001780/178090e.pdf> 검색일: 2016년 7월 20일
- Hannan, Carolyn(2007),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empowerment of women in cities,

http://www.un.org/womenwatch/daw/news/speech2007/CH_stmts/2007%20Promoting%20Women%20in%20Cities%20Korea%20August%202007.pdf, 검색일: 2016년 8월 9일
Liz Bondi · Linda Peake(1988), Gender and the City: Urban Politics Revisited, Women in Cities: Part of the series Women in Society, Macmillan Publishers
Harvey, David(2008), The right to the City, New Left Review 54,
<https://newleftreview.org/II/53/david-harvey-the-right-to-the-city> 검색일: 2016년 7월 12일

신문기사

김서영 · 최미랑(2016), 거울에 비친 당신도 여성혐오 피해자 될 수 있다 (경향신문 5월 26일자 A9면4단)
이재욱, 방준호(2016), 나홀로 작업에 날아간 ‘19살의 꿈’ (한겨레신문 5월 29일자 A10면)
정은주 · 박태우 · 이재욱(2016), 스크린도어 고장 연 1만여건 ‘월 140만원 청년’ 돌려막기 (한겨레신문 5월 31일자 A5면)

인터넷자료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www.nfds.go.kr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2016년 11월 기준) <http://www.daejeon.go.kr>
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통계DB <https://gsis.kwdi.re.kr/gsis/kr/main.html>
통계청 2016 사회조사 <http://kostat.go.kr/survey/society/index.action>
통계청 주제별통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한국언론재단 종합뉴스DB, www.kinds.or.kr
<http://habitat.aq.upm.es/boletin/n7/acharter.html> 검색일: 2016년 7월 21일
http://www.hic-gs.org/content/Mexico_Charter_R2C_2010.pdf 검색일: 2016년 8월 1일
http://ville.montreal.qc.ca/pls/portal/docs/page/charte_mtl_fr/media/documents/charte_montrealise_anglais.pdf 검색일: 2016년 8월 3일
http://www.google.co.uk/url?url=http://www.hic-al.org/documento.cfm%3Fid_documento%3D1286&rct=j&frm=1&q=&esrc=s&sa=U&ved=0ahUKEwio5fTR3oPOAhXEi5QKHXqGDM0QFggaMAE&usq=AFQjCNGA8C_ZsktL91OHEJH2C9JkU87jQ
The City Statute of Brazil A commentary, <http://www.ifrc.org/docs/idrl/945EN.pdf>, 검색일: 2016년 8월 3일
<http://femmesetvilles.org/conference> 검색일: 2016년 8월 9일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D, 검색일: 2016년 9월1일

강희영(2015), 여성, 안전한가?-교육 및 정보욕구 높지만, 재난재해 대처능력 떨어져, 여성가족리포트 2015 제2호
안태윤(2015),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5), 서울시민의 안전인식과 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충북여성발전센터(2105), 충청북도 성주류화포럼, 젠더관점에서 바라본 충북의 안전정책 포럼집

연구보고서 2016-44

안전분야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발행인 유 재 일

발행일 2016년 1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전화 : 042-530-3500 팩스 :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 대전문화사 TEL 042-252-7208 FAX 042-255-720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